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공직선거 후보자의 도덕성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를  
중심으로 -

2019 년 2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근 우

# 공직선거 후보자의 도덕성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상 현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9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근 우

김근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12 월

위 원 장 이 석 원 (인)

부위원장 정 광 호 (인)

위 원 김 상 현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도덕성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 항목 중 전과 기록과 체납 기록에 주목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고려하여 투표를 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에 필요한 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체납기록에 대한 정보는 선거기간동안 공개되는 개별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개별 후보자의 당선여부 및 득표율은 선거 종료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후보자의 전과 개수 및 후보자 본인의 세금체납 여부이고, 종속변수는 당선여부와 득표율이다. 분석방법은 당선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을 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고,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을 때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전과 개수와 세금체납여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의 도덕성이 선거결과에 미치는지 여부와 그 영향력의 크기는 지역별, 정당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후보자 요인 중 도덕성을 중점적인 변수로 보았다는 점,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전과개수를 변수로 하였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주요어** : 전과, 체납,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결과, 후보자, 도덕성

**학 번** : 2014-23668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	4
제 1 절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의의 .....	4
1.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	4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의의 .....	6
제 2 절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이론적 논의 .....	7
1. 사회학적 접근법: 소속집단 .....	8
2. 사회심리학적 접근법: 정당일체감 .....	9
3. 경제학적 접근법: 합리적 선택이론 .....	10
4. 인지적 접근법: 유권자의 관심 .....	12
제 3 절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과 이론적 논의 .....	13
제 4 절 후보자의 도덕성과 유권자의 선택 .....	15
제 5 절 선행연구의 검토 .....	17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21
제 1 절 변수의 설정 .....	21
1. 종속변수 .....	21
2. 독립변수 .....	22
3. 통제변수 .....	23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	25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27

제 4 장 분석결과 .....	29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	29
제 2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	36
제 3 절 다중 회귀분석 .....	39
제 4 절 지역별·정당별 분석결과 .....	44
제 5 장 결론 .....	54
제 1 절 결과의 요약 .....	54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보완점 .....	55
참고문헌 .....	57
부    록 .....	65
Abstract .....	92

## 표 목 차

[표 1] 변수의 범주화 .....	27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	30
[표 3] 연구대상자의 세금체납여부 .....	32
[표 4] 연구대상자의 전과유무 .....	34
[표 5] 전과유무 및 세금체납여부에 따른 당선·낙선 결과	35
[표 6]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36
[표 7] 독립변수간 상호작용 효과 유무 검증 .....	39
[표 8] 전과개수와 득표율간 지역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	40
[표 9] 체납여부와 득표율간 지역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	40
[표 10] 전과개수와 득표율간 정당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	40
[표 11] 체납여부와 득표율간 정당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	41
[표 12] 다중회귀분석 결과 .....	41
[표 13] 정당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45
[표 14] 정당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상 유의한 변수 결과내용 45	
[표 15] 정당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	46
[표 16] 정당별 다중회귀분석상 유의한 변수 결과내용 .....	47
[표 17] 지역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49
[표 18] 지역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유의한 변수 결과내용	50
[표 19] 지역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	50
[표 20] 지역별 다중회귀분석상 유의한 변수 결과내용 .....	51
[부록 표1] 더불어민주당 분석 결과(로지스틱) .....	65
[부록 표2] 더불어민주당 분석 결과(다중회귀) .....	67
[부록 표3] 자유한국당 분석 결과(로지스틱) .....	68
[부록 표4] 자유한국당 분석 결과(다중회귀) .....	69

[부록 표5] 바른미래당 분석 결과(다중회귀) .....	70
[부록 표6] 민주평화당 분석 결과(로지스틱) .....	71
[부록 표7] 민주평화당 분석 결과(다중회귀) .....	72
[부록 표8] 정의당 분석 결과(다중회귀) .....	73
[부록 표9] 기타·무소속 분석 결과(로지스틱) .....	74
[부록 표10] 기타·무소속 분석 결과(다중회귀) .....	75
[부록 표11] 서울 분석 결과(로지스틱) .....	76
[부록 표12] 서울 분석 결과(다중회귀) .....	77
[부록 표13] 경기 분석 결과(로지스틱) .....	78
[부록 표14] 경기 분석 결과(다중회귀) .....	79
[부록 표15] 인천 분석 결과(로지스틱) .....	80
[부록 표16] 인천 분석 결과(다중회귀) .....	81
[부록 표17] 강원 분석 결과(로지스틱) .....	82
[부록 표18] 강원 분석 결과(다중회귀) .....	83
[부록 표19] 충청 분석 결과(로지스틱) .....	84
[부록 표20] 충청 분석 결과(다중회귀) .....	85
[부록 표21] 전라 분석 결과(로지스틱) .....	86
[부록 표22] 전라 분석 결과(로지스틱) .....	87
[부록 표23] 경북 분석 결과(로지스틱) .....	88
[부록 표24] 경북 분석 결과(다중회귀) .....	89
[부록 표25] 경남 분석 결과(로지스틱) .....	90
[부록 표26] 경남 분석 결과(다중회귀) .....	91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25
----------------------	----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도덕성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제도로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유권자에 대한 선출된 대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책임성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획득하는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와 후보자의 과거 실적에 대해서 유권자가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이 중에서 회고적 투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보상과 처벌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유권자들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좋은 후보’의 조건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적인 자질은 최소한의 요건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정보공개 제도는 유권자가 도덕성의 측면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송병권·윤지성 2016).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병역사항, 재산 내역, 세금 납부실적, 전과 기록 등 정보공개가 실시된 이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까지 후보자 정보공개가 확대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정보공개 자료를 추가해서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sup>1)</sup> 동안 선거공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후보자 정보

---

1) 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제2호

공개 자료의 게재를 의무화함으로써 유권자의 편의를 돕는 방향으로 후보자 정보공개 제도가 개선되어 왔다. 또한 전과 기록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공개범위가 확대되었다(송병권·윤지성, 2016).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정치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뛰어난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의 삶의 여건이 향상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주민의 숫자가 늘어난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능하거나 독선적인 경우에는 지역은 침체되고 인구는 줄어들며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된다(이기우·권배근, 2008). 또한 지역에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현상이 또한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공직자의 공적 선출 행위인 지방선거는 그 의미가 크다(안중경, 2016).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유권자들은 기초자치단체장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개인적 자질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양한 편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당선되면 그들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발전이라는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위치에 선다. 공공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윤리적 성격을 가지며 이를 수행하는 자 또한 높은 공적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가치의 구현은 공공재인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이 사용된다. 이러한 수단의 사용이 정당성을 얻고 대상자의 순응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공적기대가 필연적이다. 최근 장관,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덕성의 흠결로 인해 스스로 사퇴하는 후보자도 나오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선거로 취임하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당선 후 조직, 인사, 예산

등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도덕성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 항목 중 전과 기록과 세금 체납 기록에 주목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고려하여 투표를 하는지 살펴본다. 물론 후보자의 전과 기록과 체납 기록이 도덕성에 대한 완전한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을 어기고 세금을 체납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1차적인 검증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송병권·윤지성, 2016).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고, 후보자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도덕성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후보자의 세금체납기록과 전과기록을 유권자들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투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면, 정당의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검증된 후보자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공천되어 당선된다면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전과기록과 세금 체납기록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들이다.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전과기록, 학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정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선거공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선거공보는 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에 공개된다. 연구를 위해 선거기간 중에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전과기록과 체납기록을 포함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 결과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중도 사퇴 후보를 제외하고 총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출마한 총 749명의 후보자들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 제 1 절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의의

#### 1.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와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참정권과 자치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김진하, 2010).

먼저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제헌 헌법 제97조), 이에 따라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제1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법은 지역 주민들이 시·읍·면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각급 단위의 지방의회에서 시·읍·면의 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형태의 지방선거제도를 명시하였다.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1949년의 지방자치법이 지방 자치를 실시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주주의 정착을 희망하는 의회와 정국의 안정을 위해 권력집중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갈등 속에서 비록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았고, 이듬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는 연기되었다(김진하, 2010).

1950년 총선에서 참패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였으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새로운 집권 기반을 국회 밖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원외 자유당의 결성을 조장하고,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지방선거를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실시하였다. 동년 4월에 1차 시·읍·면 의회 의원을 선출했고, 5월에는 1차 도의회 의원을 선출한 것이 오늘날 지방선거의 효시가 되었다. 1952년 제1회 지방선거는 자신의 집권 연장을 원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로 실시되고, 친여 성향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어 이후 부산정치 파동 등에 전위대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선출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선출되었고 형식적이거나 민주주의의 모양을 다소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김진하, 2010).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방의회 권력과 자치단체장의 부패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민준기 외 2008), 1956년 두 번째 치러진 지방선거는 국민 주권이라는 면에서는 더 진일보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1956년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시·읍·면의 의회뿐만 아니라, 단체장도 주민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제2공화국은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더욱 확대하여, 서울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면장, 읍장, 이장을 모두 주민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의 한 기둥으로 지방자치가 확립되고 지방선거가 그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었으나, 박정

회 대통령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자치단체장을 상급기관에서 임명하게 하고, 그 후 유신을 선포하여 통일 이전까지 지방선거를 잠정적으로 유보시킴에 따라서, 이에 지방선거는 잠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라졌다(김진하 2010).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한 것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인 1991년이였다. 1991년 시·군·구 의원 선거와 광역시·도 의원 선거가 차례로 열렸으나, 지방선거가 중단되기 이전의 1960년 수준의 지방자치나 지방선거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했던 1960년 지방선거와 달리, 1991년의 부활된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임명직이었고 선출대상이 아니었다. 1995년에 와서 각급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2018년까지 7회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요약하면, 한국의 지방선거는 1952년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로 출발하였으나 제3, 4, 5공화국에서 선거도 자치도 없는 지방 권한 부재의 30년을 보내고, 1995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발전하여, 그동안 일곱 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다(김진하, 2010).

##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의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이다. 지방자치를 성공시키는 조건은 건전하고 민주적인 지방정치의 복원에 있는데, 지방자치 복원의 중심에 있는 제도적 요소가 지방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지방행정의 책임자이자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주체인 자치단체장과 견제자인 의회의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주민은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정치행위자를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운영자로 선출하는 것이다(Meadowcroft, 2001). 누가 총원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지역주민이 선택하는지는 지방정치인 총원의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서

재호, 2011).

지방자치법은 제6장에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으로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3조). 집행기관은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중앙정부의 영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순한 사무의 관리자나 집행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와 함께 주요 정책의 결정권을 비롯하여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일환 2004).

## 제2절.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이론적 논의

유권자의 투표 행태(voting behavior)란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기권하는 의사 결정 양태를 의미한다(송건섭·이곤수, 2011).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사회학적 접근법, 사회심리학적 접근법, 경제학적 접근법, 인지적 접근법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전용주 외, 2017).

## 1. 사회학적 접근법: 소속집단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라자스펠드(Paul F.Lazarsfeld)와 그의 동료들은 194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대중매체나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선호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했다. 이들은 최초로 패널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유권자 행태를 연구했고,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분석하여 어떤 특성을 지닌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설명했다. 사회학적 접근법(sociological approach)에 근거한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의 선호는 그들이 어떤 사회집단이나 사회네트워크(인종, 계층, 종교, 지역 등)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주요한 영향을 받는다. 즉, 유권자가 동일한 사회집단이나 사회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면, 투표결정에서 동일한 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권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속해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전용주 외, 2017).

이처럼 집단을 강조하는 양상은 사회균열(social cleavage) 개념의 등장과 적용으로 나아간다.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사회집단은 국가마다 다르며, 또 한 국가 내에서도 시기별로 다르다. 이를 이해하려면 ‘정치사회학적 관점’ 혹은 ‘비교사회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 관점은 한 사회 주요 집단의 형성과 변화를 규정하는 ‘사회균열’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그에 따른 정당체제 편성에 주목하고 있다(Lipset and Rokkan, 1967; Rae and Taylor, 1970).

컬럼비아 학파의 투표행태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본격적인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발전의 선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뉴욕 주의 한 마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 문제가 있었다. 즉, 이들이 발견한 유권자 투표행태의 결정요인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미국 미시간대학교의 학자들이었다(전용주 외, 2017).



## 2. 사회심리학적 접근법: 정당일체감

이 관점은 인구 사회학적 배경보다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미시간 학파라고 불리는 이들의 연구는 미국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프로젝트인 ‘연방선거연구(National Election studies: NES)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선택의 이유를 직접 물어본 실증적 자료가 생김으로써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자료를 활용해 미시간대학교의 캠벨(Angus Campbell)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미국의 유권자’를 발간했다(전용주 외, 2017).

이들이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립한 투표행태 이론은 사회심리학적 접근법(Socio-psychological approach)으로 지칭된다. 이들의 이론적 모형 안에는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귀속감, 쟁점에 대한 정서적 태도, 후보자에 대한 정서적 태도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태도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다. 정당일체감은 ‘유권자 개인이 하나의 정당에 대해 느끼는 애착심’으로 정의되며, 후보자나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후보나 공약을 선택할 때 정책의 내용보다는 어느 정당의 후보인지 또는 어느 정당의 공약인지를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 선택 기준이며,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바라보는 일종의 인지 지도(cognitive map) 혹은 선택을 위한 지름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당일체감은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한 결과이며 성인이 된 후에도 지니는 ‘감정’이기에 쉽게 변하지도 않는다(전용주 외, 2017).

컬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접근법’이나 미시간 학파의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이론에서 그리는 유권자는 쟁점이나 후보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충분한 ‘정보’나 ‘능력’도 없다. 이

이론에서 바라보는 유권자는 매우 수동적 존재인 것이다(전용주 외, 2017).

### 3. 경제학적 관점: 합리적 선택이론

앞의 두 이론은 곧 비판에 직면했다. 키(V.O.Key)는 대표적인 비판자로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서 쟁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표행태를 전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로 구분했다. 전자는 선거에 출마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집권 이후 미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투표하는 것이며, 후자는 현 정부나 현직자의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키는 유권자가 '회고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Key, 1966).

이러한 학문적 관심의 전환은 경제학에서 발전된 이론과 방법론의 도움으로 더욱 진전되었다. 경제학적 관점의 기원은 다운스(Anthony Downs)의 저서 『민주주의의 경제적 이론(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에서 찾을 수 있다(Downs 1957). 그가 제기한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유권자는 정당의 이념, 공약, 쟁점,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유권자는 투표참여를 결정하기 이전에 여당이 제공했던 과거의 효용과 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앞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상적인 효용을 비교한다. 이후 정당들 사이에서 효용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하고 투표에 참여한다. 그러나 정당이 제공하는 효용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한다. 경제학적 관점은 유권자가 투표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선거에서 자신의 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P), 투표결과로 유권자 자신이 획득하게 될 혜택의 기댓값(B), 투표에 대한 비용(C) 등으로 설명한다. 즉, 기대효용의 값이 비용의 값보다 큰 경우( $P \times B > C$ )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유권자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작기 때문에 0에 가깝다. 투표하는데 조금이라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확률(P)의 가치를 상당히 과대평가한 일부 유권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것이 바로 ‘투표의 역설(the paradox of voting)’이다. 실제 선거의 경우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고 있기에, 라이커와 오데슈은 P, B, C의 개념 이외에 시민의 의무(D)를 소개한다. 이들에 의하면 유권자는  $PB - C + D > 0$ 인 경우 투표에 참여한다고 본다. 시민의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만족감이 비용을 상쇄하여 유권자는 투표참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Riker and Ordeshook 1968, 이재철 2013).

경제학적 관점에서 유권자의 기대 효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데이비스(Otto Davis) 등에 의하면 선거에서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할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됨으로써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대효용과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경우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대효용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표의 방향을 선택한다(Davis, Hinich and Ordeshook 1970). 이때 유권자가 계산하는 기대효용의 값은 소외와 무차별 등으로 설명한다. 첫째, 소외는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거리로 이해한다.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혹은 정당과 거리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효용은 증가하고, 멀다고 느낄수록 효용은 감소한다. 둘째, 무차별 혹은 차별은 선거에서 경쟁하는 후보자들 사이의 차별 혹은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유권자가 경쟁하는 후보자들 혹은 정당들 사이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면 효용은 증가한다. 그러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효용은 감소한다. 이밖에 현직자 혹은 여당에 대한 성과의 평가를 기대효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직자나 여당 및 현 정부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의 강도가 강한 유권자의 경우(예를 들어 매우 긍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선거 결과에 더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결정한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투표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김왕식 2008).

#### 4. 인지적 관점: 유권자의 관심

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선거 관심, 정치적 효능감, 선거 정보, 투표 경험 등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결정한다고 본다(이재철 2013). 선거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는 정치 행위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선거에서 이들은 선택할 후보자나 정당을 미리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투표참여에 적극적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투표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서현진 2008). 정치적 효능감도 투표참여 등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정치적 효능감이 강한 유권자는 투표참여에 적극적이다. 자신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의 행동이 정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정치적 효능감이 약한 유권자는 정치체계와 같은 구조적 환경에 압도되어 투표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안형기·신범순 2006, 이명행 2011, Bone and Ranney 1967).

대중매체도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Iyengar and Kinder 2010). 선거에 대한 정보를 잘 인지하고 있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선거에서 경쟁하는 후보자 혹은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 유권자는 경쟁하는 후보자와 정당들 사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효용의 차이를 느끼며 투표참여에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박찬욱 1993; 문우진 2009).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확산된 스마트 기기,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은 정치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정보의 양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매체와 비교하여 인터넷은 비용이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도 정치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쉽다는 것이다(이현우 2003).

한편 투표에 참여한 경험이 투표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태는 반복되는 정치적 습관이라는 주장이다. 유권자가 된 이후 처음 맞이한 선거에서 투표를 경험한 유권자는 다음 번 선거에서도 습관처럼 투표에 참여한다. 반면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는 다음 번 선거에서도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습관처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라 할지라도 모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때때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습관에 의해 이들은 다시 투표에 참여한다고 본다(Fowler 2006; Aldrich, Montgomery, and Wood 2010).

### 제3절.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과 이론적 논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투표를 통해 정책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혹은 사전적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이 취약하거나 부패한 정치인을 걸러낼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서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송건섭·이부희 2008).

첫째,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S-O-R모델이다(박이석, 2005). 이는 외부 상황에 대한 자극(stimulus)과 영향요인이 유권자(objects)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투표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유권자의 반응(response)을 이끌어 내어 투표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모델은 유권자의 행태에 대한 지적인 관심보다는 주요 설명변수 중 몇 개를 조작함으로써 그 행태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송건섭·이부희 2008).

둘째,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정당일체감, 이슈에 대한 태도, 후보자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Campbell 모

델이다. 여기서 정당일체감은 이슈에 대한 태도와 후보자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Campbell의 모델은 구성변수의 개념화와 측정에 문제가 있으며, 각 변수간의 상호작용관계,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와 방법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다.(고영욱, 1993). 또한 이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수는 정당, 이슈, 이미지 등에 국한되며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 및 사회적 속성 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송건섭·이부희 2008).

셋째, 투표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자신에게 주어진 선거의 선택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Lindon모델이다. 여기서 개인의 정치적 태도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의 인생경로와 인성, 사회적 요건, 생활상태, 개인의 후보자 접촉, 최근의 사건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투표결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변수를 망라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치밀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분석모델로 이상적이라고 평가된다(송명학, 2003). 다만 이 모델은 소비자 행태분석과 관련해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나 유권자의 행태분석에 대한 연구로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송건섭·이부희, 2008).

넷째, 투표선택에는 후보자에 대한 인지과정을 빼놓을 수 없으며 유권자는 여러 인지요인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모형이 바로 Shama 모델이다. 유권자의 투표결정과정을 후보자 선택과 포기에 대한 결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은 투표과정을 거쳐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권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특성을 선택하여 후보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유권자는 정치경험이 적은 후보자보다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후보를 우호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정치스타일이 낮게 평가되는 후보자보다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후보를 우호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유권자는 자신의 도덕체계와 비슷한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는 후보자 속성을 선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 그러나 Shama 모델은 유권자와 후보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합리적 투표결정과정은 설명할 수 있으나, 정당과 유권자에 의한 투표선택과정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송건섭·이부희, 2008).

#### 제4절. 후보자의 도덕성과 유권자의 선택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대략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당 요인으로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당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정당 요인이란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다른 후보자와 공유하는 요인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후보자 요인으로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당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후보자 요인’이란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다른 후보자들과 공유하지 않는 요인 중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의 총칭이다. 셋째는 정책 요인으로서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이나 이슈가 당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이갑윤·이현우 2000).

공직선거 후보자의 도덕성은 후보자의 자질 또는 능력을 구성하는 후보자 요인인데, 후보자 요인은 후보자들의 개인적 성향(candidate traits)을 의미한다. 개인의 성향이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개인의 반응적 특성을 범주화한 것이며, 만일 개인이 같은 패턴으로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게 되면, 이러한 범주들은 점차 개인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개인의 성향은 반복적으로 관찰된 행동 패턴에 기초하며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다(김성연 2017).

이러한 개인의 성향은 개인들 간의 상호 작용 및 관계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대부분의 상호 작용 및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성향은 일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범주화한 것이므로 이러한 예측을 어느 정도 가능

하게 한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 성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김성연 2017).

후보자의 개인적 성향이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이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들의 개인적 성향은 이들이 당선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Funk(1999)는 후보자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기준으로 능력과 도덕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고 본다.

또한 후보자의 개인적 성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휴리스틱(heuristics) 혹은 정보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고 또 필요한 정보를 애써 찾을 만큼 선거에 관심이 없으며, 따라서 선거에서 주로 휴리스틱에 의존하여 후보를 선택한다(Lodge and Stroh 1993). 후보자의 개인적 성향은 복잡한 정책 공약이나 정책 입장에 비해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한 휴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다(Kinder 1986). 즉,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과 관련된 특성들은 이들이 당선된 후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쉽고 또 유용한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이들의 개인적 특성에 기초해서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성연, 2017)

이러한 측면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유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정당투표), 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정당투표), 교육감 총 7표를 행사해야 한다.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에게 있어서 도덕성이라는 기준은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에 사익에 매몰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만약 후보자의 도덕성이 유권자들의 기준에 따를 때 중대한 결함으로 여겨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도덕성 수준이 낮다고 평



가되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거나 적어도 정당 공천과정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공직자에 의한 행정부패가 감소하는 효과도 얻어진다.

##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유권자들이 도덕성이라는 후보자의 자질을 고려하여 선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유권자들이 선거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지에 관해서는 미국 정치학계에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송병권·윤지성 2016).

이 연구들은 주로 회고적 투표의 관점에서 부패와 관련된 추문(scandal)이 현역 의원들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 선거에서 추문에 연관된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서 당선가능성이 떨어진다(Abramowitz 1988, 1991; Alford et al. 1994; Brown 2006a, 2006b; Dimock and Jacobson 1995; Peters and Welch 1980; Song 2016; Stewart 1994; Welch and Hibbing 1997). 추문에 관련된 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본 선거(general election) 이전에 치러지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추문에 휘말린 후보자들은 본 선거에 비해 당내 예비선거에서 덜 걸러지는 경향이 있지만(Brown 2006; Welch and Hibbing 1997), 예비선거에서는 추문에 휘말린 현역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더 강한 도전자들을 만나서 선거에서 고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Hirano and Snyder 2012).

다른 나라에서도 부정부패나 추문이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선거에서는 2009년 의회의 비용지출에 관련된 추문이 이와 관련된 후보자들에게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Pattie and Johnston 2012; Eggers and Fisher 2011). 이렇듯 부정부패와 관련된 추문에 연루된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서 적은 득표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추문에 연루된 미국 의원들의 다수가 여전히 당선되기 때문에 추문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한다(Basinger 2013; Brown 2006a; Peters and Welch 1980; Welch and Hibbing 1997).

한국의 선거연구를 살펴보면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정당보다는 후보자 요인, 정확히 말하면 ‘인물투표’에 대한 관심이 투표결정 요인으로 주목을 받았다(길승흠 1993; 길승흠 외 1987). 예를 들어, 1963년 선거에서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이 66퍼센트, 1973년 선거에서는 55퍼센트, 1985년 선거에서는 46퍼센트에 달한다(길승흠 외 1987). 하지만 기존의 인물투표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상 연고주의에 대한 것이고 후보자의 자질이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한 것은 아니었다(송병권·윤지성 2016).

후보자의 자질이 한국 선거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정보공개가 명시화된 것과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주목을 받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송병권·윤지성 2016). 이갑윤·이현우는 제14~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요인 중 정당요인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한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후보자 정보공개 항목인 병역, 전과, 재산, 납세실적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갑윤·이현우 2000). 안문석과 황민섭은 전과, 병역이행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납세실적은 유의수준 0.1에서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안문석·황민섭 2002).

조기숙과 김선웅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 항목인 병역과 납세실적을 검토했지만 해당 변수들이 지역구들 사이의 투표율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보았다(조기숙·김선웅 2002). 김석우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병역과 전과 기록을 통제변수로 활용했는데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석우 2006).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김석우·전용주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자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재산, 전과, 단체장 경력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김석우·전용주 2008) 반면에 박명호와 김민선은 현역의원의 개인적 자질이 정치적 경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면서 현역의원의 병역, 납세, 전과 기록은 선거구의 정치적 경쟁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다(박명호·김민선 200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대상으로 한 이선중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전과, 세금 체납 여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선중 2012). 하지만 신두철은 후보자의 정보공개는 도덕성과 관련된 점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지지후보 결정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보공개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신두철 2007).

문진주·강승모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실적 및 개인적 특성이 당선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납세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직업, 학력에 대해서는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진주·강승모, 2016). 후보자의 도덕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부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만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선일은 후보자 개인의 특성을 ‘지역, 소속, 연령, 학력, 직업, 납세 및 병역, 전과기록’으로 구분하고 3선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전체 당선자를 서로 비교하였다(전선일, 2004). 그러나 이것은 분야별 기준에 의해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쳤고, 비교기준 간의 상호관계성을 고려한 상관관

계분석이나 인과관계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전선일은 또 다른 연구에서 제2~3회 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득표요인에 대해 분석했는데, 독립변수에 정치적 요인이라 하여 병역이행 여부, 범죄경력 여부 등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후보자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병역이행 여부나 범죄경력 여부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범죄경력 여부가 유의미했다(전선일, 2007).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1995년 이후 1998년, 2002년 3차례 모두 한 후보자가 당선된 지역과 3차례 모두 다른 후보자가 당선된 지역으로만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연구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김석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후보자 개인의 연령, 학력, 재산, 직업, 현직 여부 모두가 선거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김석우, 2004). 통제변수에 본 연구와 유사하게 병역필 여부와 전과 변수가 포함되었는데 병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전과변수는 그렇지 않았다. 후보자의 개인적 요인과 선거결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석우 등은 2006년에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를 분석했는데, 광역단체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광역의회의원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는 모두 후보자 개인의 연령, 학력, 전과여부, 재산 등의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김석우 외, 2008). 후보자 개인적 배경과 자질이 선거의 당락 및 득표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 연구이다.

이외에도 송건섭·이근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공약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인물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송건섭·이근수, 2011). 김정기는 시장 후보자를 특정하여 상대후보와 비교하여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요인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현직후보의 직무수행평가, 자질평가, 공약평가, 정당일체감 순으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기, 2012).

이렇듯 한국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존재하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하면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연구결과들은 후보자의 자질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대다수이고(송병권·윤지성 2016) 후보자의 자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들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선거나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 제 1 절 변수의 설정

본 연구는 후보자의 도덕성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를 분석하였다. 선거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각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공개되는데, 여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후보자의 학력, 재산, 병역, 전과, 납세 증명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선거공보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종속변수를 이용했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후보자의 득표율로서 출마지역에서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전체 유효투

표수로 나누고 이에 100을 곱한 값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제시된 각 후보자별 득표율 자료를 사용했다. 한편 독립변수들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지도 파악하기 위하여 두번째 종속변수로 후보자의 당선여부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후보자의 전과 개수, 후보자 본인의 세금체납여부이다. 김석우(2006), 이선중(2012) 등의 연구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전과 여부는 후보자의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송병권·윤지성(2016)은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연구의 결과가 분석대상에 따라 서로 엇갈린다. 또한 2014년부터 전과기록 공개의 범위가 징역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전과여부가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과 여부가 아닌 전과 개수가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더 의미있는 변수일 것이라고 보아 전과 개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송병권·윤지성(2016)은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어 생긴 전과 기록을 제외하고 후보자의 전과기록 여부를 판단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후보와 뇌물, 횡령 등 부패범죄를 저지른 후보를 유권자들이 같은 범주의 정치인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의 전과기록 중 후보자가 선거공보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전과라고 소명한 것을 제외하고 후보자의 전과 개수를 판단하였다.

한편 후보자 본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후보자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전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후보자가 국민의 세금을 집행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세금납부의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세금체납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기록에 한정하였다.

### 3. 통제변수

후보자의 전과 개수나 세금체납여부만이 후보자의 당선여부(또는 득표율)에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후보자의 소속정당, 연령, 현직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이 후보자의 당선여부(또는 득표율)에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첫째, 2000년대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현직자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윤종빈 2006; 한정택 2007; 박윤희 2015; 김한나·박원호 2016). 현직자 효과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 다른 후보자들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1) 현역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들에 잘 알려지고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 2) 현역의원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풍부한 자금과 조직을 가졌다는 점, 3) 현역의원의 자질과 능력이 다른 후보자보다 뛰어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이갑윤·이현우 2000; 윤종빈 2006; 한정택 2007; 박윤희 2015; Mayhew 1974; Mondak 1995).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현직 단체장일수록 당선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는바(김석우 2004), 현직 단체장이 득표율이 높거나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현직자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출마지역의 현역 단체장이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했다.

둘째, 과거 출마 지역의 단체장 경력은 후보자의 당선 및 득표율에 긍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과거 단체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면 출마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 건실한 지역조직을 갖추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후보자보다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득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정수현, 2017). 현직경험 변수는 후보자가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역임한 적이 있으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했다.

셋째, 후보자의 소속정당은 후보자의 당선여부(또는 득표율)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내에서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 높은 지지를 획득하는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나타난다.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당선여부(또는 득표율)에 주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에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넷째, 후보자가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후보자의 당선여부(또는 득표율)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병역의무 역시 유권자에 따라서는 도덕성의 한 요소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이행여부가 늘 쟁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당선여부(또는 득표율)에 주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다섯째, 후보자의 연령 역시 후보자의 당선여부(또는 득표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직업적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점이 당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명도와 연륜을 중시하는 유권자의 성향으로 인해 후보자의 연령이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좌승희·한현옥 2002)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여섯째, 후보자의 학력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후보자의 지적 수준이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조사는 없다. 하지만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유권자들이 학력이 높은 사람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김석우,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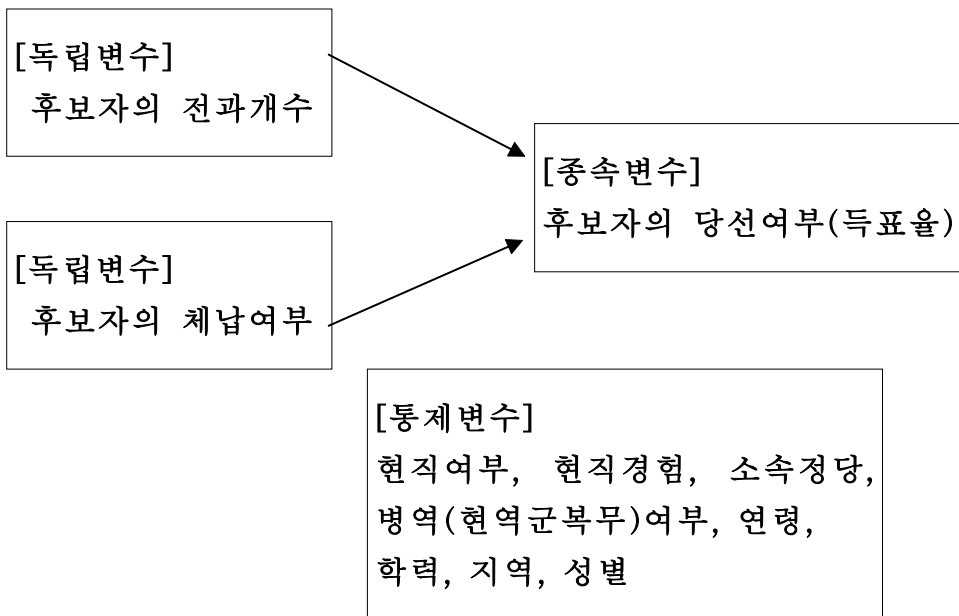
일곱째, 그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높은 득표를 하는 지역주의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지역의 구분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나누는 지역의 구분을 따르되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각각 성격이 다른 독자적인 지역으로 보아 세 지역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성별이 남성이면 1의 값을, 여성이면 0의 값을 부여해 성별의 차이가 당선 또는 득표율의 차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했다

##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이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인 후보자의 전과 개수와 세금체납기록이 종속변수인 당선여부(또는 득표율)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틀을 [그림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 외에 소속정당, 성별, 현직여부 등은 기술통계 및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이선중(2012)과 송병권·윤지성(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후보자의 세금체납, 전과여부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결과마다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전과개수와 세금체납여부를 후보자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후보자가 세금체납기록이 있다면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후보자가 세금체납기록이 있다면 후보자의 득표율은 감소할 것이다.

헌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도덕성 측면에서 유권자가 낮게 평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후보자의 당선여부와 득표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설1>,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 3> 후보자의 전과 개수가 많을수록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4> 후보자의 전과 개수가 많을수록 후보자의 득표율은 감소할 것이다.

2014년부터 전과기록 공개의 대상범위가 징역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유권자는 더 많은 후보자들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의 입장에서 전과 유무보다는 전과 개수가 후보자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더 적합한 기준이라 보고, 이것이 후보자의 당선여부와 득표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설3>과 <가설4>를 설정하였다.

###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하였다. 선거공보에서 각 후보자의 성별, 현직경험여부, 현직자여부, 전과개수, 세금체납여부 등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로 사용할 정보를 수집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선거 이후 코딩된 자료의 후보자들의 당선여부와 득표율을 수집한 후 자료를 코딩하였다.

[표1] 변수의 범주화

변수	범주화 기준
성별	남=0, 여=1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2, 바른미래당=3 민주평화당=4, 정의당=5, 기타 및 무소속=6
지역	서울=1, 경기=2, 인천=3, 강원=4, 충청=5, 전라=6, 경북=7, 경남=8
현직경험여부	경험없음=0, 경험있음=1
현직자여부	현직자아님=0, 현직자=1
병역(현역 군복무) 여부	불이행 <sup>2)</sup> =0, 이행=1
세금체납여부	체납=0, 완납 <sup>3)</sup> =1
전과개수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라고 후보자가 소명한 것을 제 외한 후보자의 전과개수
당선여부	낙선=0, 당선=1

득표율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전체 유효투표수로 나누고 이에 100을 곱한 값(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에서 제시됨)
-----	--

본 연구에 필요한 통계분석은 IBM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명목변수인 후보자의 당선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때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에 비연속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이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이 없으며 독립변수가 모두 비연속 변수여도 이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일반선형모형의 확장으로 선형회귀모형의 다른 확장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홍세희, 2005).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후보자의 전과개수와 세금체납이 후보자의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분석했다.

한편 후보자의 도덕성은 후보자의 소속정당이나 출마지역에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정당별, 지역별로 후보자의 전과개수와 세금체납이 후보자의 득표율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 
- 2) 여성 포함
  - 3) 세금납부기록 없는 3명 포함

## 제 4 장 분석 결과

###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각 소속정당별 후보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18명으로 29.1%, 자유한국당은 187명으로 25.0%, 바른미래당은 96명으로 12.8%, 민주평화당은 44명으로 5.9%, 정의당은 15명으로 2.0%, 그 외 기타 정당 및 무소속은 189명으로 25.2%로 나타났다(녹색당 1명, 대한애국당 9명, 민중당 6명, 한국국민당 1명, 한반도미래연합 1명, 무소속 171명).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714명(95.3%), 여자 35명(4.7%)으로 나타났다. 납세여부를 살펴보면, 완납<sup>4)</sup>은 664명(82.4%), 체납은 85명(17.6%)으로 나타났다. 병역여부(현역군복무)를 살펴보면, 불이행<sup>5)</sup>은 123명(16.6%), 이행은 626명(83.4%)으로 나타났다.

전과여부를 살펴보면 없음은 464명으로 61.9%, 있음은 285명으로 38.1%로 나타났다. 전과개수를 살펴보면, 평균이 .77, 표준편차가 1.49로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평균이 58.34, 표준편차가 6.99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학력미기재 9명으로 1.2%, 고졸이하가 60명으로 8.0%, 전문대졸이 27명으로 3.6%, 대졸이 239명으로 31.9%, 대학원졸이 414명으로 55.3%였다. 80% 이상의 후보자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명으로 11.7%, 경기도가 103명으로 13.8%, 인천이 34명으로 4.5%, 강원이 60명으로 8%, 충청이 92명으로 12.3%, 전라가 131명으로 17.5%, 경북이 105명으로 14%, 경남이 136명으로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세금납부기록 없는 3명 포함

5) 여성 포함

현직경험을 살펴보면 없음은 76.9%으로 576명, 있음은 23.1%으로 173명으로 나타났다. 현직여부를 살펴보면 아님은 611명으로 81.6%, 현직은 138명으로 18.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당선여부를 살펴보면 낙선은 523명(69.8%), 당선 226명(30.2%)으로 나타났다.

[표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변수	항목	빈도(명)	%	평균	표준 표차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218	29.1		
	자유한국당	187	25.0		
	바른미래당	96	12.8		
	민주평화당	44	5.9		
	정의당	15	2.0		
	기타 및 무소속	189	25.2		
출마지역	서울	88	11.7		
	경기	103	13.8		
	인천	34	4.5		
	강원	60	8.0		
	충청	92	12.3		
	전라	131	17.5		
	경북	105	14.0		
	경남	136	18.2		

성별	남자	714	95.3		
	여자	35	4.7		
학력	미기재	9	1.2		
	고졸이하	60	8.0		
	전문대졸	27	3.6		
	대졸	239	31.9		
	대학원졸	414	55.3		
납세여부	완납	664	82.4		
	체납	85	17.6		
병역(현역 군복무) 여부	불이행	123	16.3		
	이행	626	83.4		
전과여부	없음	464	61.9		
	있음	285	38.1		
전과개수				.77	1.49
연령				58.34	6.99
현직경험	없음	576	76.9		
	있음	173	23.1		
현직여부	아님	611	81.6		
	현직	138	18.4		
당선여부	낙선	523	69.8		
	당선	226	30.2		

후보자들의 세금체납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중 세금 체납자는 85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정당을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중 9.1%가 세금을 체납했으며, 자유한국당은 10.7%, 바른미래당은 8.3%, 민주평화당 22.7%, 정의당 20%, 기타 및 무소속 13.2%로 민주평화당 소속 출마자가 세금체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후보자 중 세금체납자의 비중도 [표3]에 제시하였다.

[표3] 연구대상자의 세금체납여부

변수	항목	세금완납 (비중)	세금체납 (비중)	계
성별	남	631 (88.4%)	83 (11.6%)	714
	여	33 (94.3%)	2 (5.7%)	35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199 (91.3%)	19 (8.7%)	218
	자유한국당	167 (89.3%)	20 (10.7%)	187
	바른미래당	88 (91.7%)	8 (8.3%)	96
	민주평화당	34 (77.3%)	10 (22.7%)	44
	정의당	12 (80%)	3 (20%)	15
	기타 및 무소속	164 (86.8%)	25 (13.2%)	189



출마지역	서울	77 (87.5%)	11 (12.5%)	88
	경기	87 (84.5%)	16 (15.5%)	103
	인천	30 (88.2%)	4 (11.8%)	34
	강원	56 (93.3%)	4 (6.7%)	60
	충청	85 (92.4%)	7 (7.6%)	92
	전라	111 (49.6%)	113 (50.4%)	124
	경북	107 (93.0%)	8 (7.0%)	105
	경남	114 (83.8%)	22 (16.2%)	136

한편 후보자들의 전과유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285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3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정당을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중 35.3%가 전과가 있으며, 자유한국당 34.8%, 바른미래당 36.5%, 민주평화당 45.4%, 정의당 46.6%, 기타 및 무소속 42.8%로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당은 정의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보자 중 전과자의 비중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4] 연구대상자의 전과유무

변수	항목	전과있음 (비중)	전과없음 (비중)	계
성별	남	281 (39.6%)	433 (60.4%)	714
	여	4 (11.4%)	31 (88.6%)	35
출마정당	더불어민주당	77 (35.3%)	141 (64.7%)	218
	자유한국당	65 (34.8%)	122 (65.2%)	187
	바른미래당	35 (36.5%)	61 (63.5%)	96
	민주평화당	20 (45.5%)	24 (54.5%)	44
	정의당	7 (46.7%)	8 (53.3%)	15
	기타 및 무소속	81 (42.9%)	108 (57.1%)	189
출마지역	서울	28 (31.8%)	60 (68.2%)	88
	경기	34 (33.0%)	69 (67.0%)	103
	인천	15 (44.1%)	19 (55.9%)	34
	강원	29 (48.3%)	31 (51.7%)	60
	충청	31 (33.7%)	61 (66.3%)	92
	전라	51 (41.1%)	73 (58.9%)	124

	경북	40 (38.1%)	65 (61.9%)	105
	경남	53 (39.0%)	83 (61.0%)	136

후보자들의 전과유무와 세금체납여부를 기준으로 당락 결과를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전과기록이 있는 집단의 후보자 중 약 73.7%가 낙선을 하였으며 26.3%인 75명만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체납기록이 있는 집단의 후보자 중 약 84.7%가 낙선하였으며 15.3%인 13명만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전과유무 및 세금체납여부에 따른 당선·낙선 결과

구분		당락여부		전체
		낙선	당선	
전과기록 없음	빈도	313(67.5%)	151(32.5%)	464(100%)
	당락여부의 %	59.8%	66.8%	61.9%
전과기록 있음	빈도	210(73.7%)	75(26.3%)	285(100%)
	당락여부의 %	41.2%	33.2%	38.1%
세금완납	빈도	451(67.9%)	213(32.1%)	664(100%)
	당락여부의 %	86.2%	94.2%	88.7%
세금체납	빈도	72(84.7%)	13(15.3%)	85(100%)
	당락여부의 %	13.8%	5.8%	11.3%

이러한 결과들만으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후보들의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다음 절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이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본다.

## 제2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설1>, <가설3>를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의 당선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6]은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6]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납세여부(체납)	-.808	.382	4.483	.034*	.446	.211	.942
전과개수	-.283	.110	6.595	.010*	.754	.608	.935
정당			132.755	.000			
더불어민주당	3.327	.334	99.027	.000**	27.847	14.462	53.621
자유한국당	1.123	.348	10.413	.001**	3.075	1.554	6.083
바른미래당	-18.628	3987.906	.000	.996	.000	.000	
민주평화당	.250	.594	.177	.674	1.284	.401	4.117
정의당	-18.563	10060.989	.000	.999	.000	.000	
학력			.945	.918			
미기재	-19.626	11472.547	.000	.999	.000	.000	
고졸이하	-.215	.447	.232	.630	.806	.336	1.938
전문대졸	.342	.608	.317	.573	1.408	.428	4.639
대졸	-.140	.236	.353	.552	.869	.547	1.380

지역			2.191	.948				
경남	-.116	.419	.076	.782	.891	.391	2.026	
경북	.078	.442	.031	.860	1.081	.455	2.571	
인천	-.092	.615	.022	.882	.913	.273	3.048	
전라	.287	.472	.369	.544	1.332	.528	3.361	
충청	-.187	.453	.170	.680	.829	.341	2.016	
경기	.124	.447	.077	.782	1.132	.472	2.716	
강원	-.266	.511	.271	.603	.767	.282	2.086	
성별(여성)	-1.035	.607	2.911	.088	.355	.108	1.167	
병역(미필)	.234	.351	.447	.504	1.264	.636	2.514	
연령	-.008	.019	.165	.685	.992	.956	1.030	
현직경험(있음)	.881	.464	3.606	.058	2.414	.972	5.994	
현직여부(현직)	.787	.477	2.725	.099	2.197	.863	5.592	
상수항	-1.996	1.215	2.698	.101	.136			
Cox&Snell $R^2 = .374$								
Nagelkerke $R^2 = .529$								
Hosmer와 lemeshow검정=8.718(.367)								

\* $p < 0.05$ , \*\* $p < 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회귀분석에서  $R^2$ 은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Nagelkerke  $R^2$ 이 52.9%으로 매우 높은 설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Hosmer와 lemeshow 검정은 유의확률이 0.05 이하이면 모형이 유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검정력 값이 8.718이고 유의확률은 0.05보다 크므로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의수준

은 통상적인 기준인 0.05로 설정하여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설1>에서 설정한 후보자의 세금체납여부는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먼저 납세여부를 살펴보면, B(회귀계수)값이 -0.808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0.03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Exp}(B)$ 값의 값이 0.446이므로 체납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세금을 완납한 후보자에 비해 당선가능성이 0.446배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설1>을 채택한다.

둘째, <가설3>에서 설정한 후보자의 전과개수도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에 영향을 주었다. 전과개수의 B 값이 -0.28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0.01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Exp}(B)$ 값이 0.754이므로 전과의 개수가 1단위 증가하면 당선가능성은 0.754배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설3>을 채택한다.

셋째, 통제변수로 설정했던 정당의 영향력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 분포상 양대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B값이 각각 3.327, 1.12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0.05미만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ext{Exp}(B)$ 값의 각각 27.847, 3.075이므로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기타·무소속일 때 비해 민주당일 경우는 당선가능성이 27.847배, 자유한국당일 경우는 3.075배 증가한다.

넷째, 이외에 출마지역, 병역여부, 현직경험 및 현직여부, 성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의수준을 0.1로 완화해서 본다면 현직경험, 현직여부, 성별은 유의미한 변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현직경험이 있거나 현직자인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당선가능성이 커지지만, 여성 후보자는 남성 후보자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작아진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당선여부에 미친 요인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세금체납여부와 전과 개수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2>,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의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그에 앞서 독립변수로 설정했던 체납여부와 전과개수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표7]과 같다. 모형1은 체납여부만 포함한 모형, 모형2는 전과개수까지 포함한 모형, 모형3은 상호작용효과를 감안한 모형이다. 분석결과 모형3에서 유의확률 F변화량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독립변수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7] 독립변수간 상호작용 효과유무 검증

모형	R	R <sup>2</sup>	ad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R <sup>2</sup> 변화량	F 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DW
1	.840	.705	.697	11.39121	.705	78.951	.000	
2	.842	.709	.700	11.32874	.004	9.029	.003	
3	.842	.709	.699	11.33656	.000	.001	.994	2.424

또한 우리나라 선거에서 지역이나 정당변수가 득표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는바, 지역이나 정당변수가 조절변수로서 작용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지역변수와 정당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조절효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8]~[표11]과 같다. 각 분석결과에서 지역이나 정당을 포함한 모형2와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3에서 유의확률 F변화량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조절효과는 없다고 판단한다.

[표8] 전과개수와 득표율간 지역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모형	R	$R^2$	$adR^2$	추정값의 표준오차	$R^2$ 변화량	F 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DW
1	.839	.704	.697	11.37470	.704	108.630	.000	
2	.842	.709	.700	11.32874	.005	1.850	.075	
3	.844	.712	.700	11.32307	.003	1.104	.359	2.438

[표9] 체납여부와 득표율간 지역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모형	R	$R^2$	$adR^2$	추정값의 표준오차	$R^2$ 변화량	F 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DW
1	.839	.704	.697	11.37470	.704	108.630	.000	
2	.842	.709	.700	11.32874	.005	1.850	.075	
3	.844	.713	.701	11.31204	.004	1.306	.244	2.424

[표10] 전과개수와 득표율간 정당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모형	R	$R^2$	$adR^2$	추정값의 표준오차	$R^2$ 변화량	F 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DW
1	.839	.704	.697	11.37470	.704	108.630	.000	
2	.842	.709	.700	11.32874	.005	1.850	.075	
3	.844	.712	.701	11.30189	.003	1.690	.135	2.435



[표11] 체납여부와 득표율간 정당변수의 조절효과 검증

모형	R	R <sup>2</sup>	adR <sup>2</sup>	추정값의 표준오차	R <sup>2</sup> 변화량	F 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DW
1	.839	.704	.697	11.37470	.704	108.630	.000	
2	.842	.709	.700	11.32874	.005	1.850	.075	
3	.844	.713	.701	11.31204	.004	1.306	.244	2.424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이나 조절변수의 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독립변수의 주효과를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는 [표12]와 같다.

[표12]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체납	-4.175	1.342	-.064	-3.111	.002**	1.057			
전과개수	-.875	.291	-.063	-3.005	.003**	1.099			
정당(민주)	32.785	1.188	.721	27.587	.000**	1.701			
정당(자한)	19.048	1.283	.399	14.844	.000**	1.800			
정당(바른)	-5.521	1.513	-.089	-3.649	.000**	1.493			
정당(민평)	4.104	2.007	.047	2.045	.041*	1.299	2.424	.709	76.746** (.000)
정당(정의)	-6.053	3.172	-.041	-1.909	.057	1.152			
지역(경남)	.211	1.593	.004	.132	.895	2.201			
지역(경북)	.893	1.725	.015	.518	.605	2.093			
지역(인천)	.351	2.317	.004	.152	.880	1.358			
지역(전라)	4.807	1.688	.088	2.847	.005**	2.400			
지역(충청)	.728	1.734	.012	.420	.675	1.890			

지역(경기)	.994	1.665	.017	.597	.551	1.919
지역(강원)	.276	1.968	.004	.140	.888	1.666
학력 (미기재)	-5.229	3.979	-.028	-1.314	.189	1.097
학력 (고졸이하)	-5.753	1.638	-.076	-3.513	.000**	1.154
학력 (전문대졸)	.370	2.306	.003	.161	.872	1.078
학력 (대졸)	-1.576	.943	-.036	-1.672	.095	1.127
성별	-1.301	2.350	-.013	-.554	.580	1.436
병역	.984	1.332	.018	.739	.460	1.422
연령	.064	.069	.022	.922	.357	1.363
현직경험	8.239	1.834	.168	4.492	.000**	3.488
현직여부 (상수)	5.985	1.978	.112	3.026	.003**	3.432
	10.490	4.288		2.447	.015	

※ 준거(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 \*p<0.05, \*\*p<0.01, ad  $R^2=.700$

F값이 76.7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R^2$ 은 70.9%으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Variation Inflation Factor(다중공선성)은 1부터 무한대까지 수를 가지는 데, 일반적으로 1이상부터 10 이하는 다중공선성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변수에서 VIF 는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 2.424로 2에 가까움으로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변수에 이상은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세금체납 변수의 경우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111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4.175으로 나타났으므로 세금을 체납한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하여 득표율이 -4.175 감소한다. 즉,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후보자의 득표율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가설2>를 채택한다.

둘째, 전과개수 변수의 경우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05이고 유의확률이 0.00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875으로 나타났으므로 전과개수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후보자의 득표율은 0.875 감소한다. 즉, 전과개수가 늘어날수록 후보자의 득표율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가설4>를 채택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통제변수로 설정한 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것이 확인되었다. 민주당의 경우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32.785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7.58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당 후보는 기타·무소속 정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32.785 증가한다. 같은 논리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타·무소속 정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19.048 증가하고, 바른미래당 후보는 득표율이 5.521 감소하며, 민주평화당 후보는 득표율이 4.104 증가한다.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특성상 양대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지지가 쏠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득표율이 종속변수일 경우에는 현직경험여부와 현직자 여부도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경험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8.23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492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경험이 있는 후보자는 없는 후보자에 비해 득표율이 8.239 증가한다. 현직여부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5.985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26이고 유의확률이 0.00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인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득표율이 5.985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지역변수의 경우 전라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847이고 유의확률이 0.0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값이 4.807이므로, 전라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비교대상인 서울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보다 4.807 더 득표한다.

여섯째, 학력변수의 경우 '고졸이하'만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51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값이 -5.753이므로 학력이 고졸이하인 후보자는 비교대상인 학력이 대학원졸인 후보자들에 비하여 득표율이 5.753 감소한다.

이외에 병역여부, 성별, 연령 등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당선여부 뿐만 아니라 득표율에 있어서도 후보자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전과 개수와 세금체납여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과 <가설 4>를 채택할 수 있다.

## 제4절 지역별·정당별 분석결과

후보자의 전과개수와 세금체납여부는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강한 것 역시 동시에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정당별,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날지 살펴보고자 지역별·정당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과 정당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변수가 매우 적어 그 결과만 아래의 [표13]~[표20]과 같이 정리하고 분석 수치는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지역별·정당별로 분석을 할 때는 지역이나 정당의 영향력이 전국단위로 하였을 때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13] 정당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유의, X: 유의하지 않음)

정당 변수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민주 평화당	기타 및 무소속
체납여부	X	X	X	X
전과개수	X	X	X	X
지역	○	○	X	X
학력	X	X	X	X
성별	X	X	X	X
병역	X	X	X	X
연령	○	X	X	X
현직경험	X	X	X	X
현직여부	X	X	X	X

※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불가

※ 준거(reference)변수 : 출마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 p=0.05

[표14] 정당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상 유의한 변수 결과 내용

정당 결과	내용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남): p=0.030, Exp(B)=0.082로 서울 대비 당선가능성이 0.082배로 감소</li> <li>○ 지역(경북): p=0.000, Exp(B)=0.002로 서울 대비 당선가능성이 0.002배로 감소</li> </ul>

	○연령: $p=0.046$ , $\text{Exp}(B)=0.925$ 로 연령이 1단위 늘어날수록 당선가능성이 0.925배 감소
자유한국당	○지역(경남): $p=0.033$ , $\text{Exp}(B)=11.081$ 로 서울 대비 당선가능성이 11.081배로 증가 ○지역(경북): $p=0.000$ , $\text{Exp}(B)=106.471$ 로 서울 대비 당선가능성이 106.471배로 증가

[표15] 정당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 유의, X: 유의하지 않음)

정당 변수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기타 및 무소속
체납여부	X	X	X	X	X
전과개수	○	X	X	X	X
지역	○	○	○	○	○
학력	X	X	X	X	○
성별(여성)	X	X	X	X	X
병역(미필)	○	X	X	X	○
연령	X	X	X	X	X
현직경험(있음)	X	X	○	X	○
현직여부(현직)	X	○	○	X	X

※ 정의당은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아서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 준거(reference)변수 : 출마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  $p=0.05$

[표16] 정당별 다중회귀분석상 유의한 변수에 대한 결과내용

정당	결과	내용
더불어민주당		○ 전과개수: p=0.005, 전과개수가 1단위 늘어날수록 득표율이 1.936% 감소
		○ 지역(경남): p=0.000, 서울에 비해 11.048 득표율 감소 ○ 지역(경북): p=0.000, 서울에 비해 26.751 득표율 감소 ○ 지역(전라): p=0.000, 서울에 비해 5.538 득표율 감소 <sup>6)</sup> ○ 지역(충청): p=0.000, 서울에 비해 8.472 득표율 감소 ○ 지역(강원): p=0.000, 서울에 비해 9.442 득표율 감소
		○ 병역: p=0.01, 병역미필 후보는 병역필 후보에 비해 5.769 득표율 증가
		○ 현직경험: p=0.07, 현직경험 있는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6.255 득표율 증가
자유한국당		○ 지역(경남): p=0.000, 서울에 비해 12.290 득표율 증가 ○ 지역(경북): p=0.000, 서울에 비해 15.182 득표율 증가 ○ 지역(전라): p=0.000, 서울에 비해 21.891 득표율 감소 ○ 지역(충청): p=0.000, 서울에 비해 7.457 득표율 증가 ○ 지역(강원): p=0.000, 서울에 비해 8.074 득표율 증가
		○ 현직여부: p=0.004, 현직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7.894 득표율 증가

6)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전라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지역에서 전라지역보다 더 높은 지지를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바른미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남): p=0.000, 서울 대비 3.631% 득표율 감소</li> <li>○ 지역(인천): p=0.000, 서울 대비 3.777% 득표율 감소</li> <li>○ 지역(경기): p=0.000, 서울 대비 2.852% 득표율 감소</li> <li>○ 지역(전라): p=0.000, 서울 대비 3.428% 득표율 감소</li> </ul>
	○ 현직경험: p=0.000, 현직경험 있는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10.689% 득표율 증가
	○ 현직여부: p=0.029, 현직경험 있는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득표율이 4.532% 증가
민주평화당	○ 지역(전라): p=0.005, 서울 대비 23.200% 득표율 증가
기타 및 무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북): p=0.026, 서울 대비 12.487% 득표율 증가</li> <li>○ 지역(전라): p=0.022, 서울 대비 12.673% 득표율 증가</li> </ul>
	○ 학 력: p=0.002, 대졸 후보는 대학원졸 후보에 비해 6.833% 득표율 감소
	○ 병 역: p=0.021, 병역미필 후보는 병역필 후보에 비해 7.152% 득표율 감소
	○ 현직경험: p=0.000, 현직경험 있는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득표율이 15.123% 증가



[표17] 지역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유의, X: 유의하지 않음)

지역 변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북	경남
체납여부	X	X	X	X	X	X	X	X
전과개수	X	X	X	X	X	X	X	X
정당	X	X	X	○	X	X	○	○
학력	X	X	X	○	X	X	X	X
성별	X	X	X	X	X	X	X	X
병역	X	X	X	X	X	X	X	X
연령	X	X	X	X	X	X	X	X
현직경험	X	X	X	X	X	X	X	X
현직여부	X	X	X	X	X	X	X	X

※ 준거(reference)변수 : 정당-기타 및 무소속, 학력-대학원이상

※ p=0.05

[표 18] 지역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상 유의한 변수 결과 내용

지역	결과	내용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math>p=0.023</math>, <math>\text{Exp}(B)=43.063</math>으로 기타·무소속 정당 후보자에 비해 민주당 후보자는 43.063배 당선가능성이 증가</li> <li>○ 학력: <math>p=0.026</math>, <math>\text{Exp}(B)=0.065</math>로 대학원졸 후보자에 비해 대졸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0.065배로 감소</li> </ul>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math>p=0.000</math>, <math>\text{Exp}(B)=74.518</math>으로 기타·무소속 정당 후보자에 비해 자유한국당 후보자는 43.063배 당선가능성이 증가</li> </ul>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민주): <math>p=0.000</math>, <math>\text{Exp}(B)=33.662</math>으로 기타·무소속 정당 후보자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33.662배 당선가능성이 증가</li> <li>○ 정당(자한): <math>p=0.000</math>, <math>\text{Exp}(B)=7.926</math>으로 기타·무소속 정당 후보자에 비해 자유한국당 후보자는 7.926배 당선가능성이 증가</li> </ul>

[표19] 지역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 유의, X: 유의하지 않음)

지역 변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북	경남
체납여부	○	X	X	X	X	X	X	X
전과개수	X	○	X	X	X	○	X	X
정당	○	○	○	○	○	○	○	○

학력	X	X	X	X	X	○	○	X
성별	X	X	X	X	X	X	X	X
병역	X	X	X	X	X	X	X	X
연령	X	X	X	X	X	X	X	X
현직경험	X	X	X	X	X	X	○	X
현직여부	X	○	X	X	X	X	X	X

※ 준거(reference)변수 : 정당-기타 및 무소속, 학력-대학원이상

※ p=0.05

[표20] 지역별 다중 회귀분석상 유의한 변수에 대한 결과내용

결과 정당	내용
서울	○ 세금체납: p=0.031, 전과개수가 1단위 늘어날수록 득표율이 4.525% 감소
	○ 정당(민주): p=0.000,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54.431 득표율 증가
	○ 정당(자한): p=0.000,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25.562 득표율 증가
	○ 정당(바른): p=0.000,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7.034 득표율 증가

7) 유의수준 0.1 가정시 현직경험 변수도 양의 영향력을 가짐

8) 유의수준 0.1 가정시 체납변수도 음의 영향력을 가짐

경기	○ 전과개수: $p=0.042$ , 전과가 1단위 증가할수록 득표율 1.502% 감소( $B=-1.502$ )
	○ 정당(민주):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48.052% 득표율 증가
	○ 정당(자한):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21.167% 득표율 증가
	○ 현직여부: $p=0.001$ , 현직경험 있는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득표율이 11.908% 증가
인천	○ 정당(민주):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48.330% 득표율 증가
	○ 정당(자한): $p=0.006$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20.663% 득표율 증가
강원	○ 정당(민주):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31.010% 득표율 증가
	○ 정당(자한):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18.504% 득표율 증가
	○ 현직경험: $p=0.024$ , 현직경험 있는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득표율이 16.145% 증가
충청7)	○ 정당(민주):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32.405% 득표율 증가
	○ 정당(자한):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19.498% 득표율 증가
전라	○ 전과개수: $p=0.029$ , 전과가 1단위 증가할수록 득표율은 2.115% 감소
	○ 학 력: $p=0.035$ , 대졸 후보는 대학원졸 후보에 비해 5.711% 득표율 감소
	○ 정당(민주):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29.392% 득표율 증가
	○ 정당(민평): $p=0.006$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9.057% 득표율 증가

경북	○ 현직경험: $p=0.006$ , 현직경험 있는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 득표율이 13.283 증가
	○ 학 력: $p=0.002$ , 고졸 후보는 대학원졸 후보에 비해 14.190 득표율 감소
	○ 정당(민주): $p=0.001$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11.982 득표율 증가 ○ 정당(자한):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21.217 득표율 증가
경남 <sup>8)</sup>	○ 정당(민주):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35.609 득표율 증가 ○ 정당(자한): $p=0.000$ , 기타·무소속 후보에 비해 30.354 득표율 증가

## 제 5 장 결론

### 제1절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덕성을 측정하는 변수는 후보자의 납세여부와 전과 개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후보자의 선거공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들 중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자들은 464명으로 전체 후보자 중 61.9%였고,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은 285명으로 38.1%였다. 전체 후보자들의 평균 전과개수는 0.77개였다.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당선된 후보자는 75명으로 당선자 중 33.2%를 차지했다.

둘째, 후보자들 중 세금체납이 있는 후보자들은 85명으로 전체 후보자 중 11.3%였고, 세금체납이 없는 후보자들은 664명으로 88.7%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금체납을 했음에도 당선된 후보자는 13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5.8%였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후보자의 당락에 세금체납과 전과개수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금을 체납한 후보자는 세금을 완납한 후보자에 비해 당선가능성이 0.446배 감소한다. 또한 후보자의 전과개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당선가능성은 0.754배 감소한다.

넷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후보자의 득표율에 세금체납과 전과개수가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금을 체납한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득표율이 4.175 감소한다. 또한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1단위 증가하면 득표율은 0.875 감소한다.

다섯째, 정당별,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는 그 결과가 상이했다. 세금체납과 전과개수가 모두 유의미한 정당이나 지역은 없었고, 둘 다 유의미하지 않은 정당과 지역도 있었다. 통제변수로 설정했던 다른

변수들이 지역별/정당별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보완점

본 연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의 도덕성이 유권자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투표행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고려하며 선거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장)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유권자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던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제7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 중 체납기록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5.8%에 불과하다. 비록 당선자 3명 중 1명은(33.2%) 전과기록이 있지만, 전과개수가 많은 후보자일수록 당선가능성 및 득표율은 하락한다. 이는 후보자 선택시 유권자들이 도덕성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덕성과 관련된 정보 공개의 범위와 내용이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과거 5년간 기부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흥기용과 문진주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강제적 지출이고, 기부는 비강제적인 임의적 지출로 보았다(흥기용·문진주 2012). 공직자는 강제지출로서의 납세뿐만 아니라 임의적 지출로서의 기부를 통해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직전에 일시적으로 납에게 보이기 위한 정치적 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

는데, 이러한 후보자와 평소에 타인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 온 후보자를 가려내는 데도 기부내역의 공개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홍기용·문진주 2012)

본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후보자의 도덕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과의 경중을 판단하지 않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으나, 전과는 종류도 다양하고 경중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에 사람마다 그 평가가 달리 이루어질 수 있다. 세금체납의 경우도 세금체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세금체납의 횟수나 세금체납액수의 크기, 납세 세목이 무엇인지 등도 유권자에게는 중요한 고려대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전과와 세금체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적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_\_\_\_\_.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 참여」, 과주: 나남
- 고영욱, 1993, “우리나라의 정치마케팅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일환, 200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승흠, 1993,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변화: 1963~1993년.”,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3호, pp.133-152
- 길승흠·김광웅·안병만, 1987, 「한국선거론」, 서울: 다산출판사.
- 김석우, 2004, “기초자치단체장 충원에 관한 연구 - 6·13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 17대 총선과 정치적 충원: 당선자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1호, pp.215-231
- 김석우, 2006, “17대 총선과 정치적 충원: 당선자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집 2호, pp.287-315
- 김석우·전용주, 2008, “18대 총선 당선자 결정요인 분석: 정치적 충원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집 2호, pp.153-171
- 김석우·임성학·전용주, “한국정치사에서 5·31 지방선거의 의미 - 정치적 충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2호 pp.349-373
- 김성연, 2017,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정치연구」 제26집 3호, pp.175-204
- 김왕식, 2008, “제17대 대선에서의 투표 참여 요인.”,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집 제2호, pp.135-151
- 김정기, 2012, “2010년 (통합)창원시장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분석”, 「한국행정논집」, 제24집 제1호, pp.211-234

- 김진하, 2010, “지방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6·2 지방선거 분석: 서울시장 선거 사례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호, pp.5-32
- 김한나·박원호. 2016. “제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정당의 공천 방식과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집 2호, pp.51-75
- 문우진, 2009,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4호, pp.327-349
- 문진주·강승모, 2016,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실적을 통한 납세의식 분석”, 「세무회계연구」. 제50권. pp.80-101
- 민준기·신명순·이정복·윤성이, 2008, 「한국의 정치: 제도, 과정, 발전」, 서울: 나남
- 박명호·김민선, 2009, “후보자 요인, 현직 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집 1호, pp.165-79
- 박윤희, 2015, “국회의원 현직효과가 재당선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8대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pp.37-64
- 박이석, 2005,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찬욱, 1993,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 후보자 인지능력과 투표 참여 의사 결정: 제14대 총선 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3호. pp.153-174
- 서재호, 2011,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연구모형 수립에 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2호, pp.253-276
- 서현진, 2008, “제17대 대선과 투표참여” 「변화하는 유권자 2」. 이현우·권혁용 공편,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송건섭·이근수, 2011,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5권 제3호집): pp.49-71

- 송건섭·이부희, 2008,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1호, pp.5-30
- 송명학, 2003, “정치마케팅 PR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병권·윤지성, 2016, “후보자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5집 3호, pp.85-107
- 신두철, 2007, “5·31 지방선거의 특징과 선거캠페인” 「한국정당학회보」 제6집 제1호, pp.55-78
- 안문석·황민섭, 2002, “시민단체의 공직후보 낙선운동의 영향력 평가-16대 총선에서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2호, pp.227-253
- 안중경, 2016, “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택의 영향요인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형기·신범순, 2006, “정치참여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지적 효능감: 네티즌의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1호, pp.27-49
- 윤종빈, 2002,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의원의 득표율증감 분석: 지역구활동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pp.129-46
- 윤종빈. 2006.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3호, pp.145-164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 행태」. 서울: 후마니타스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pp.149-170
- 이기우·권배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 제22권 제2호, pp.53-76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요인이 18대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 세대별 투표행태와 구성효과를 중심으로.”, 이내영·서현진 편 「변화하는 한국

- 유권자 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pp.101-31
- 이명행, 2011, “제5회 전국지방선거의 투표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유권자 효능감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제2호, pp.385-418
- 이선중, 2012, “공직선거 후보자의 청렴성은 유권자들의 선택(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19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17집 4호, pp.39-59
- 이재철. 2013. “유권자의 연령별 투표참여 분석”, 「분쟁해결연구」, 제11권 2호
- 이현우, 2003,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슈와 후보자 전략”, 2003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_\_\_\_\_, 2011, 제5회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와 유권자 평가, 「선거연구」 제1호, pp.37-64
- 장승진, 2015,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2호, pp.25-52
- 좌승희·한현옥, 2002, “한국 정치시장의 특성과 정치개혁과제”, 「제도연구4」,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전선일, 2004, “3선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4집 제2호
- 전선일, 200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득표요인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수현, 2017,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 득표율과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36권 제2호, pp.129-157
- 조기숙·김선웅, 2002,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16대 총선 투표율을 낮추었나?”,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pp.163-83
- 전용주 외, 2017, 「투표행태의 이해」, 파주: 한울엠플러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한정택. 2007.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7집 3호, pp.73-99

홍기용·문진주, 2012,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을 위한 과세소득 및 기부내역의 공개 필요성”, 「대한경영학회지」 제25권 제3호, pp.3293-3313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Abramowitz, Alan I. 1988. “ Explaining Senate Election Outco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 No. 2, pp.385-403

\_\_\_\_\_. 1991. “Incumbency, Campaign Spending, and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U.S. Hous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3. No. 1, 34-56

Aldrich, J., J. Montgomery, and W. Wood. 2010. “Turnout as a Habit.” *Political Behavior*. Vol. 33. No. 4

Alford, John, Holly Teeters, Daniel S. Ward, and Rick K. Wilson. 1994. “Overdraft: The Political Cost of Congressional Malfeasance.” *Journal of Politics* 56. No. 3, pp.788-801

Basinger, Scott J. 2013. “ Scandals and Congressional Elections in the Post-Watergate Er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6. No. 2, pp.385-98

Bone, H. and Ranney A., 1976. *Politics and Voter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Brown, Lara M. 2006a. “ It’s Good to Be an Incumbent: Scandals, Corruption, and the 2006 Midterm Election.” Working Paper

- \_\_\_\_\_. 2006b. "Revisiting the Character of Congress: Scandal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66–2002."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5, No. 1–2, pp.149–72
- Converse, Philip E., 1966, "The Concept of a Normal Vote." A. Campbell,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eds. *Elections and the political order*, pp.9–39, Wiley: New York
- Davis, Hinch and Ordeshook. 1970. "An Expository Development of a Mathematical Model of the Electoral Proces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No. 2, pp.426–448
- Dimock, Michael A., and Jacobson, Gary C.. 1995. "Checks and Choices: The House Bank Scandal's Impact on Voters in 1992." *Journal of Politics* 57. No. 4, pp.1143–59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Eggers, Andrew C., and Alexander C. Fisher. 2011.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the UK Parliamentary Expenses Scandal: Did Voters Punish Corrupt MPs?" Working Paper
- Fowler, J., 2006, "Habitual Voting and Behavioral Turnout" *Journal of Politics*, Vol. 68, No. 2
- Funk, C. L., 1999, "Bringing the Candidate into Models of Candidate Evaluation." *Journal of Politics* 61, No. 3, pp.700 - 720
- Hirano, Shigeo, and Snyder, James M., 2012. "What Happens to Incumbents in Scandals?"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 No. 4, pp.447–56
- Iyengar, S. and Kinder, D., 2010,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y, Jr.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inder, D. R. 1986. "Presidential character revisited." In Lau and

- Sears (Eds.), *Political Cogn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Lipset, S. M. & Rokkan, S.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pp. 1 - 67, in: S.M. Lipset & S.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ree Press
- Lodge, M. and P. Stroh, 1993, "Inside the mental voting booth: An impression-driven process model of candidate evaluation."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pp.225-263
- Pattie, Charles, and Ron Johnston. 2012. "The Electoral Impact of the UK 2009 MPs' Expenses Scandal." *Political Studies* 60. No. 4, pp.730-50
- Mayhew, David. 1974.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eadowcroft, J. (2001). Political Recruitment and Local Representation : the Case of Liberal Democrat Councillors. *Local Government Studies*, 27(1): pp.19-36
- Mondak, Jeffery J. 1995. "Competence, Integrity, and the Electoral Success of Congressional Incumbents." *The Journal of Politics* 57, No. 4, pp.1043-1069
- Peters, John G., and Welch, Susan, 1980, "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No. 3, pp.697-708
- Rae, D. W., & Taylor, M., 1970, *The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iker, William H. & Ordeshook. Peter C.,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pp.25 - 42
- Sekhon, Jasjeet S. 2009. "Opiates for the Matches: Matching Methods for Causal Inferenc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2. No. 1, pp.487-508

Song, B. K. 2016. "Media Markets and Politicians Involved in Scandals." *Social Science Journal* 53, No. 4, pp.389-97

Stewart, Charles. 1994. " Let's Go Fly a Kite: Correlates of Involvement in the House Bank Scandal."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9. No. 4, pp.521-35

Welch, Susan, and Hibbing, John R., 1997,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1982-1990" *Journal of Politics* 59, No. 1, pp.226-239



## <부록>

### 지역별·정당별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와 다중회귀분석결과

[부록 표1] 더불어민주당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납세여부(체납)	-.801	.636	1.584	.208	.449	.129	1.563
전과개수	-.351	.201	3.039	.081	.704	.474	1.045
학력			1.183	.881			
미기재	-21.936	40192.970	.000	1.000	.000	.000	
고졸이하	-.297	.912	.106	.745	.743	.124	4.438
전문대졸	-.043	1.140	.001	.970	.958	.103	8.937
대졸	-.452	.430	1.108	.292	.636	.274	1.477
지역			26.754	.000			
경남	-2.496	1.153	4.684	.030**	.082	.009	.790
경북	-6.209	1.544	16.167	.000**	.002	.000	.041
인천	-1.357	1.576	.741	.389	.258	.012	5.656
전라	-2.321	1.187	3.824	0.51	.098	.010	1.005
충청	-2.099	1.185	3.139	.076	.123	.012	1.250
경기	.049	1.320	.001	.971	1.050	.079	13.960
강원	-2.488	1.276	3.804	.051	.083	.007	1.012
성별(여성)	-1.801	1.085	2.754	.097	.165	.020	1.386
병역(미필)	.846	.737	1.319	.251	2.331	.550	9.880

연령	-.077	.039	3.998	.046**	.925	.858	.998
현직경험(있음)	.690	.933	0.547	.460	1.994	.320	12.419
현직여부(현직)	1.907	1.125	2.873	.090	6.731	.742	61.035
상수항	7.636	2.527	9.130	.003	2071.549		

Cox&Snell  $R^2 = .367$

Nagelkerke  $R^2 = .517$

Hosmer와 lemeshow검정=3.413(.906)

\* $p < 0.05$ , \*\* $p < 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2] 더불어민주당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체납	-4.025	2.536	-.081	-1.587	.114	1.089			
전과개수	-1.936	.686	-.146	-2.823	.005**	1.132			
지역(경남)	-11.048	2.700	-.301	-4.091	.000**	2.278			
지역(경북)	-26.751	3.105	-.584	-8.617	.000**	1.935			
지역(인천)	-3.444	3.953	-.051	-0.871	.385	1.454			
지역(전라)	-5.538	2.661	-.154	-2.081	.039**	2.300			
지역(충청)	-8.472	2.779	-.210	-3.049	.003**	2.004			
지역(경기)	.615	2.826	.015	.218	.828	2.073			
지역(강원)	-9.442	3.454	-.185	-2.733	.007**	1.922			
학력 (미기재)	-16.386	10.508	-.079	-1.559	.121	1.072			
학력 (고졸이하)	-6.493	3.370	-.105	-1.927	.055	1.256	1.677	.528	12.379** (.000)
학력 (전문대졸)	-1.591	4.088	-.021	-.389	.698	1.256			
학력 (대졸)	-.374	1.592	-.013	-.235	.815	1.224			
성별	-4.237	3.826	-.066	-1.108	.269	1.492			
군복무	5.769	2.214	.155	2.606	.010**	1.501			
연령	-.084	.130	-.037	-.650	.517	1.340			
현직경험	6.255	3.435	.191	1.821	.070	4.618			
현직여부 (상수)	3.472	3.588	.099	.967	.334	4.412			
	61.579	7.539		8.168	.000				

\*p<0.05, \*\*p<0.01, ad R<sup>2</sup>=.486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3] 자유한국당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납세여부(체납)	-20.553	8264.069	.000	.998	.000	.000	
전과개수	-.040	.250	.025	.874	0.961	.589	1.568
학력			3.143	.370			
고졸이하	1.393	.845	2.718	.099	4.029	.769	21.120
전문대졸	21.014	11313.435	0.000	.999	1337267 669.536	0.000	
대졸	0.579	0.521	1.238	.266	1.785	0.643	4.954
지역			30.843	.000			
경남	2.405	1.131	4.525	.033*	11.081	1.208	101.631
경북	4.668	1.194	15.294	.000**	106.471	10.262	1104.670
인천	-18.115	11313.435	.000	.999	.000	.000	
전라	2.587	29311.130	.000	1.000	13.284	.000	
충청	1.642	1.165	1.987	.159	5.165	.527	50.654
경기	.559	1.295	.186	.666	1.749	.138	22.154
강원	1.896	1.224	2.401	.121	6.659	.605	73.259
성별(여성)	.148	1.445	.010	.919	1.159	.068	19.704
병역(미필)	-.228	.748	.093	.760	.796	.184	3.451
연령	.038	.043	.760	.383	1.039	.954	1.131
현직경험(있음)	1.624	1.184	1.883	.170	5.074	.499	51.632
현직여부(현직)	-.700	1.187	.348	.555	.496	.048	5.083
상수항	-5.864	2.823	4.314	.038	.003		
Cox&Snell $R^2 = .373$							
Nagelkerke $R^2 = .535$							
Hosmer와 lemeshow검정=7.856(.448)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4] 자유한국당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2$	F
체납	-3.117	1.924	-.087	-1.620	.107	1.158			
전과개수	-.367	.628	-.032	-.584	.560	1.165			
지역(경남)	12.290	2.016	.453	6.097	.000**	2.197			
지역(경북)	15.182	2.182	.512	6.957	.000**	2.157			
지역(인천)	2.718	3.110	.055	.874	.383	1.604			
지역(전라)	-21.891	6.056	-.204	-3.615	.000**	1.271			
지역(충청)	7.457	2.176	.251	3.427	.001**	2.145			
지역(경기)	2.844	2.068	.096	1.375	.171	1.937			
지역(강원)	8.074	2.458	.216	3.285	.001**	1.722			
학력 (고졸이하)	1.981	2.363	.046	.838	.403	1.183	1.676	.576	13.506** (.000)
학력 (전문대졸)	4.926	4.159	.065	1.184	.238	1.186			
학력 (대졸)	.727	1.356	.029	.536	.593	1.133			
성별	4.262	3.411	.083	1.250	.213	1.746			
군복무	-2.025	2.041	-.062	-.992	.322	1.581			
연령	.040	.111	.021	.364	.716	1.364			
현직경험	.879	2.711	.038	.324	.746	5.572			
현직여부 (상수)	7.894	2.702	.343	2.921	.004**	5.500			
	24.543	6.831		3.593	.000				

\* $p < 0.05$ , \*\* $p < 0.01$ , ad  $R^2 = .533$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5] 바른미래당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2$	F
체납	-1.173	1.140	-.071	-1.029	.307	1.284			
전과개수	-0.366	.249	-.101	-1.471	.145	1.266			
지역(경남)	-3.631	.993	-.273	-3.656	.000**	1.492			
지역(경북)	.481	1.265	.027	.380	.705	1.399			
지역(인천)	-3.777	1.366	-.184	-2.765	.007**	1.190			
지역(전라)	-3.428	1.431	-.167	-2.396	.019*	1.306			
지역(충청)	-.981	.991	-.080	-.990	.325	1.764			
지역(경기)	-2.852	.929	-.250	-3.071	.003**	1.769			
지역(강원)	-1.655	1.165	-.106	-1.421	.159	1.490			
학력 (미기재)	-.153	2.281	-.005	-0.067	.947	1.372			
학력 (고졸이하)	-1.973	1.599	-.087	-1.234	.221	1.320	1.906	.712	10.583** (.000)
학력 (전문대졸)	3.202	2.078	.101	1.541	.128	1.139			
학력 (대졸)	.395	.660	.042	0.599	.551	1.318			
성별	1.704	1.686	.075	1.011	.315	1.466			
군복무	.282	.896	.024	.315	.754	1.513			
연령	-.080	.055	-.114	-1.464	.147	1.621			
현직경험	10.689	1.354	.649	7.897	.000**	1.809			
현직여부 (상수)	4.532	2.034	.173	2.228	.029*	1.618			
	13.901	3.012		4.616	.000				

\* $p < 0.05$ , \*\* $p < 0.01$ , ad  $R^2 = .645$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6] 민주평화당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납세여부(체납)	4.012	5.856	.470	0.493	55.275	.001	5331827. 799
전과개수	-1.561	1.002	2.430	0.119	.210	.029	1.494
학력			1.183	.881			
미기재	-21.936	40192.970	.000	1.000	.000	.000	
고졸이하	-.297	.912	.106	.745	.743	.124	4.438
전문대졸	-.043	1.140	.001	.970	.958	.103	8.937
대졸	-.452	.430	1.108	.292	.636	.274	1.477
지역			26.754	.000			
경남	6.219	39044.075	.000	1.000	502.438	.000	
인천	1.910	42259.474	.000	1.000	6.753	.000	
전라	22.804	13053.287	.000	.999	8012271 037.858	.000	
경기	2.099	22634.479	.000	1.000	8.159	.000	
성별(여성)	-20.808	24817.425	.000	.999	.000	.000	
병역(미필)	1.278	1.838	.484	.487	3.591	.098	131.617
연령	-0.100	0.123	.659	.417	.905	.711	1.152
현직경험(있음)	-20.113	14741.609	.000	.999	.000	.000	
현직여부(현직)	19.911	14741.609	.000	.999	4438875 73.672	.000	
상수항	-17.312	13053.289	.000	.999	.000		
Cox&Snell $R^2$ =.314							
Neglkerke $R^2$ =.619							
Hosmer와 lemeshow검정=3.366(.909)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7] 민주평화당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채납	.792	6.177	.019	.128	.899	1.722			
전과개수	-3.609	1.989	-.324	-1.815	.080	2.459			
지역(경남)	18.498	15.507	.222	1.193	.243	2.681			
지역(인천)	-8.196	15.305	-.071	-.535	.597	1.337			
지역(전라)	23.200	7.602	.624	3.052	.005**	3.222			
지역(경기)	-4.370	10.427	-.073	-.419	.678	2.309			
학력 (미기재)	2.497	17.142	.021	.146	.885	1.677			
학력 (고졸이하)	-7.255	8.553	-.120	-.848	.403	1.554			
학력 (전문대졸)	10.789	14.888	.093	.725	.475	1.265	1.980	.637	3.273** (.003)
학력 (대졸)	-8.695	5.763	-.202	-1.509	.143	1.389			
성별	-7.481	12.160	-.090	-.615	.543	1.649			
군복무	4.638	6.449	.108	.719	.478	1.739			
연령	-.082	.384	-.032	-.214	.832	1.693			
현직경험	-.421	8.149	-.009	-.052	.959	2.539			
현직여부 (상수)	14.450	11.781	.210	1.227	.230	2.266			
	14.309	23.621		.606	.550				

\*p<0.05, \*\*p<0.01, ad R<sup>2</sup>=.442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8] 정의당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체납	.108	2.017	.009	.054	.966	2.200			
전과개수	.531	.582	.216	.912	.529	4.351			
지역(경남)	-5.608	5.910	-.292	-.949	.517	7.345			
지역(전라)	-2.621	2.972	-.242	-.882	.540	5.837			
지역(충청)	-3.945	4.143	-.280	-.952	.516	6.704			
지역(경기)	-.945	3.058	-.079	-.309	.809	5.058			
학력 (고졸이하)	-9.389	3.900	-.490	-2.408	.251	3.198			
학력 (전문대졸)	-1.658	4.531	-.086	-.366	.777	4.318	2.196	.819	5.871 (.313)
학력 (대졸)	-1.128	2.244	-.116	-.503	.703	4.084			
성별	4.196	4.129	.219	1.016	.495	3.586			
병역	-.792	2.077	-.081	-.382	.768	3.500			
연령	.188	.152	.255	1.242	.431	3.257			
현직경험 (상수)	15.550	3.830	.811	4.060	.154	3.085			
	-.834	5.659		-.147	.907				

\*p<0.05, \*\*p<0.01, ad R<sup>2</sup>=.987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9] 기타·무소속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납세여부(체납)	-18.961	6693.033	.000	.998	0.000	0.000	
전과개수	-.697	0.512	1.854	.173	0.498	0.182	1.358
학력			1.074	.898			
미기재	-16.947	14177.211	.000	.999	0.000	0.000	
고졸이하	.124	1.221	.010	.919	1.132	0.103	12.400
전문대졸	-.484	1.313	.136	.712	0.616	0.047	8.087
대졸	-.786	.790	.990	.320	0.456	0.097	2.142
지역			.659	.999			
경남	18.464	14364.439	.000	.999	104405964.442	0.000	
경북	18.929	14364.439	.000	.999	166276701.847	0.000	
인천	-.810	19809.393	.000	1.000	0.445	0.000	
전라	19.211	14364.439	.000	.999	220334090.079	0.000	
충청	.679	17747.253	.000	1.000	1.971	0.000	
경기	-.249	17037.965	.000	1.000	0.780	0.000	
강원	19.007	14364.439	.000	.999	179710304.113	0.000	
성별(여성)	-16.529	12654.766	.000	.999	0.000	0.000	
병역(미필)	-.865	1.280	.456	.499	0.421	0.034	5.176
연령	.064	.067	.919	.338	1.066	0.935	1.216
현직경험(있음)	1.007	1.140	.780	.377	2.737	0.293	25.571
현직여부(현직)	1.297	1.095	1.404	.236	3.660	0.428	31.292
상수항	-24.793	14364.440	.000	.999	.000		
Cox&Snell $R^2$ =.185							
Neglkerke $R^2$ =.408							
Hosmer와 lemeshow검정=4.992(.758)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10] 기타·무소속 분석 결과(다중회귀)

중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채납	-3.580	2.734	-.078	-1.310	.192	1.132			
전과개수	-.163	.433	-.023	-.377	.707	1.156			
지역(경남)	4.913	5.519	.132	.890	.375	6.949			
지역(경북)	12.487	5.542	.340	2.253	.026*	7.239			
지역(인천)	6.116	7.136	.069	.857	.393	2.066			
지역(전라)	12.673	5.474	.358	2.315	.022*	7.595			
지역(충청)	11.485	6.474	.181	1.774	.078	3.289			
지역(경기)	1.894	6.037	.033	.314	.754	3.515			
지역(강원)	6.722	6.180	.117	1.088	.278	3.683			
학력 (미기재)	-1.432	6.046	-.015	-.237	.813	1.242			
학력 (고졸이하)	-2.435	2.932	-.054	-.830	.408	1.346	2.104	.464	8.170** (.000)
학력 (전문대졸)	.349	3.896	.005	.090	.929	1.098			
학력 (대졸)	-6.833	2.125	-.207	-3.216	.002**	1.313			
성별	7.768	5.290	.101	1.469	.144	1.497			
병역	-7.152	3.071	-.164	-2.329	.021*	1.571			
연령	.042	.128	.022	.329	.742	1.470			
현직경험	15.123	3.638	.379	4.157	.000**	2.636			
현직여부 (상수)	7.689	4.236	.156	1.815	.071	2.339			
	4.207	8.643		.487	.627				

\*p<0.05, \*\*p<0.01, ad R<sup>2</sup>=.407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11] 서울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납세여부(체납)	-168.441	149109.384	.000	.999	0.000	.000	
전과개수	71.450	2929.586	.001	.981	1072106313 602.78E+31	.000	
정당			.000	1.000			
더불어민주당	437.352	291116.177	.000	.999	8.703060997 25162E+189	.000	
자유한국당	186.643	298454.198	.000	1.000	1.142427009 55982E+81	.000	
바른미래당	-56.174	290525.235	.000	1.000	0.000	.000	
민주평화당	264.239	259348.607	.000	.999	5723351727 61896E+114	.000	
정의당	-266.331	235832.963	.000	.999	0.000	.000	
학력			.000	1.000			
미기재	167.831	248922.340	.000	.999	7.728866548 06359E+72	.000	
고졸이하	209.134	183593.246	.000	.999	6.694133093 45661E+90	.000	
대졸	128.078	149077.327	.000	.999	4.204454594 93534E+55	.000	
성별(여성)	21.301	339476.138	.000	1.000	1781848790. 499	.000	
병역(미필)	95.968	220702.103	.000	1.000	4.768908765 50006E+41	.000	
연령	-4.892	387.806	.000	.990	0.008	.000	
현직경험(있음)	110.710	249127.200	.000	1.000	1.204627083 38194E+48	.000	
현직여부(현직)	9.750	382253.400	.000	1.000	17151.915	.000	
상수항	-131.408	298261.136	.000	1.000	0.000		
Cox&Snell $R^2 = .697$							
Neglkerke $R^2 = 1.000$							
Hosmer와 lemeshow검정=.000(1.000)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12] 서울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체납	-4.525	2.060	-0.065	-2.197	.031*	1.692			
전과개수	0.289	0.515	0.016	0.562	.576	1.587			
정당(민주)	54.431	2.548	1.071	21.360	.000**	4.816			
정당(자한)	25.562	2.686	.503	9.516	.000**	5.351			
정당(바른)	7.034	2.560	.133	2.748	.008**	4.479			
정당(민평)	3.278	3.397	.039	0.965	.338	3.082			
정당(정의)	1.691	4.337	.013	0.390	.698	2.258			
학력 (미기재)	1.866	3.543	.015	0.527	.600	1.507			
학력 (고졸이하)	-4.495	2.810	-.041	-1.600	.114	1.249	2.454	.962	122.993** (.000)
학력 (대졸)	0.571	1.411	.011	0.404	.687	1.512			
성별	-1.162	2.678	-.017	-0.434	.666	2.861			
군복무	1.691	2.143	.030	0.789	.433	2.726			
연령	-0.084	0.087	-.030	-0.970	.335	1.817			
현직경험	7.214	4.390	.127	1.643	.105	11.434			
현직여부 (상수)	1.669	4.582	.028	0.364	.717	11.387			
	6.760	5.206		1.299	.198				

\*p<0.05, \*\*p<0.01, ad R<sup>2</sup>=.955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13] 경기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납세여부(체납)	1.868	1.913	.954	0.329	6.478	.153	275.084
전과개수	1.523	1.791	.723	0.395	4.587	.137	153.522
정당			.000	1.000			
더불어민주당	55.973	8574.663	.000	0.995	2.03650288588 298E+24	.000	
자유한국당	19.709	7231.999	.000	0.998	362544822.163	.000	
바른미래당	-13.622	10740.612	.000	0.999	.000	.000	
민주평화당	10.897	28804.823	.000	1.000	54036.134	.000	
정의당	-8.368	19763.947	.000	1.000	.000	.000	
학력			.000	1.000			
고졸이하	12.553	22342.639	.000	1.000	282921.761	.000	
전문대졸	47.000	41313.521	.000	.999	2.58114308761 056E+20	.000	
대졸	34.820	4606.843	.000	.994	132444349313 8340.000	.000	
성별(여성)	-14.361	5481.076	.000	.998	.000	.000	
병역(미필)	13.592	5481.076	.000	.998	800021.232	.000	
연령	.268	.249	1.158	.282	1.307	.803	2.128
현직경험(있음)	14.809	3229.228	.000	.996	2701979.838	.000	
현직여부(현직)	-11.449	3229.229	.000	.997	.000	.000	
상수항	-72.168	8574.684	.000	.993	.000		
Cox&Snell $R^2 = .662$							
Nagelkerke $R^2 = .937$							
Hosmer와 Lemeshow검정=.287(1.000)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14] 경기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2$	F
체납	-.274	1.874	-.004	-.146	.884	1.140			
전과개수	-1.502	.728	-.066	-2.063	.042*	1.244			
정당(민주)	48.052	2.168	.996	22.168	.000**	2.446			
정당(자한)	21.167	2.167	.439	9.767	.000**	2.445			
정당(바른)	-.549	2.449	-.010	-.224	.823	2.233			
정당(민평)	-3.141	3.732	-.027	-.842	.402	1.286			
정당(정의)	-2.192	4.356	-.017	-.503	.616	1.328			
학력 (고졸이하)	.332	2.953	.004	.113	.911	1.367			
학력 (전문대졸)	6.487	6.736	.029	.963	.338	1.080	2.046	.928	74.953** (.000)
학력 (대졸)	2.561	1.503	.056	1.704	.092	1.315			
성별	3.266	3.379	.037	.967	.336	1.790			
군복무	-2.544	2.310	-.044	-1.101	.274	1.904			
연령	.016	.125	.004	.131	.896	1.342			
현직경험	1.700	3.092	.029	.550	.584	3.412			
현직여부 (상수)	11.908	3.597	.179	3.310	.001**	3.532			
	6.571	7.028		.935	.352				

\* $p < 0.05$ , \*\* $p < 0.01$ , ad  $R^2 = .955$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15] 인천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남세여부(체납)	-296.963	107958.788	.000	.998	.000	.000	
전과개수	39.399	40463.447	.000	.999	129065290 115680000. 000	.000	
정당			.000	1.000			
더불어민주당	-89.589	68901.956	.000	.999	.000	.000	
자유한국당	-380.437	81918.396	.000	.996	.000	.000	
바른미래당	-362.708	84651.006	.000	.997	.000	.000	
민주평화당	-96.401	79678.858	.000	.999	.000	.000	
정의당	-786.181	142009223 36.791	.000	1.000	.000	.000	
학력			.000	1.000			
미기재	-166.264	142009223 36.720	.000	1.000	.000	.000	
고졸이하	-238.463	50427.226	.000	.996	.000	.000	
전문대졸	17.817	18340.556	.000	.999	54698066.9 65	.000	
대졸	30.625	80865.129	.000	1.000	199662456 67861.200	.000	
성별(여성)	571.326	78765.908	.000	.994	1.32922166 974158E+2 48	.000	
병역(미필)	-84.265	142009223 36.863	.000	1.000	.000	.000	
연령	-28.683	1840.618	.000	.988	.000	.000	
현직경험(있음)	485.278	51196.585	.000	.992	5.66923030 226159E+2 10	.000	
현직여부(현직)	-410.573	50240.156	.000	.993	.000	.000	
상수항	1738.788	132660.615	.000	.990			
Cox&Snell $R^2 = .702$							
Nagelkerke $R^2 = 1.000$							
Hosmer와 Lemeshow검정=.000(1.000)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16] 인천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체납	5.950	7.776	.091	.765	.455	2.123			
전과개수	.206	1.996	.010	.103	.919	1.390			
정당(민주)	48.330	7.919	1.042	6.103	.000**	4.404			
정당(자한)	20.663	6.639	.446	3.112	.006**	3.096			
정당(바른)	1.128	8.481	.019	.133	.896	3.052			
정당(민평)	-3.000	12.070	-.024	-.249	.807	1.407			
정당(정의)	4.138	16.493	.046	.251	.805	5.095			
학력 (미기재)	-1.936	13.940	-.015	-.139	.891	1.877			
학력 (고졸이하)	-.907	8.282	-.012	-.110	.914	1.867	2.117	.887	76.746** (.000)
학력 (전문대졸)	7.514	6.848	.101	1.097	.288	1.276			
학력 (대졸)	2.006	5.558	.040	.361	.723	1.880			
성별	-7.433	15.873	-.059	-.468	.646	2.433			
군복무	10.042	8.633	.168	1.163	.261	3.162			
연령	.311	.442	.090	.702	.492	2.456			
현직경험	4.289	6.469	.086	.663	.516	2.547			
현직여부 (상수)	7.235	6.507	.121	1.112	.282	1.797			
	-13.671	28.371		-.482	.636				

\*p<0.05, \*\*p<0.01, ad R<sup>2</sup>=.782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17] 강원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납세여부(체납)	-19.580	15639.688	.000	.999	.000	.000	
전과개수	-1.231	.650	3.583	.058	.292	.082	1.045
정당			7.310	.063			
더불어민주당	3.763	1.656	5.160	.023*	43.063	1.676	1106.604
자유한국당	.724	1.371	.279	.598	2.062	.140	30.301
바른미래당	-18.051	11340.984	.000	.999	.000	.000	
학력			5.007	.171			
고졸이하	-.912	1.343	.462	.497	.402	.029	5.580
전문대졸	-1.387	1.759	.621	.431	.250	.008	7.856
대졸	-2.738	1.230	4.955	.026*	.065	.006	.721
병역(미필)	.679	2.082	.106	.744	1.972	.033	116.659
연령	.075	.124	.368	.544	1.078	.846	1.374
현직경험(있음)	21.805	28241.367	.000	.999	2950930 998.626	.000	
현직여부(현직)	-19.589	28241.368	.000	.999	.000	.000	
상수항	-6.047	7.672	.621	.431	.002		
Cox&Snell $R^2$ =.469							
Neglkerke $R^2$ =.665							
Hosmer와 lemeshow검정=7.877(.446)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18] 강원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체납	-0.412	4.489	-.005	-.092	.927	1.218			
전과개수	-1.014	.617	-.116	-1.643	.107	1.715			
정당(민주)	31.010	3.064	.755	10.121	.000**	1.915			
정당(자한)	18.504	3.362	.451	5.504	.000**	2.305			
정당(바른)	-3.040	3.816	-.058	-.797	.430	1.803			
학력 (고졸이하)	-.167	3.221	-.003	-.052	.959	1.400			
학력 (전문대졸)	-2.771	4.414	-.044	-.628	.533	1.703	2.255	.863	24.479** (.000)
학력 (대졸)	-3.172	2.490	-.078	-1.274	.209	1.304			
병역	-2.277	4.435	-.036	-.513	.610	1.719			
연령	-.127	.238	-.032	-.534	.596	1.263			
현직경험	16.145	6.932	.372	2.329	.024*	8.752			
현직여부 (상수)	.891	7.551	.020	.118	.907	9.400			
	21.634	14.055		1.539	130				

\*p<0.05, \*\*p<0.01, ad R<sup>2</sup>=.828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19] 층층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남세여부(체납)	-1.783	1.303	1.873	.171	.168	.013	2.161
전과개수	.473	.515	.845	.358	1.605	.585	4.401
정당			.000	1.000			
더불어민주당	37.909	9748.477	.000	.997	2908148 2238798 400.000	.000	
자유한국당	1.176	9972.471	.000	1.000	3.243	.000	
바른미래당	-16.586	12633.295	.000	.999	.000	.000	
정의당	17.560	41358.284	.000	1.000	4230126 9.586	.000	
학력			.710	.871			
고졸이하	18.518	4517.622	.000	.997	1101927 23.280	.000	
전문대졸	-2.431	56841.443	.000	1.000	.088	.000	
대졸	-.747	.886	.710	.399	.474	.083	2.692
성별(여성)	-.745	2.081	.128	.720	.475	.008	28.070
병역(미필)	.658	1.165	.319	.572	1.930	.197	18.925
연령	-.075	.077	.947	.330	.928	.798	1.079
현직경험(있음)	-.227	1.306	.030	.862	.797	.062	10.293
현직여부(현직)	36.280	6725.709	.000	.996	5702571 2463170 10.000	.000	
상수항	-32.748	9748.478	.000	.997	.000		
Cox&Snell $R^2 = .568$							
Neglkerke $R^2 = .788$							
Hosmer와 lemeshow검정=2.552(.959)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20] 층청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2$	F
체납	-2.062	3.929	-.029	-.525	.601	1.272			
전과개수	.274	.648	.024	.422	.674	1.343			
정당(민주)	32.405	3.453	.807	9.385	.000**	3.120			
정당(자한)	19.498	3.633	.486	5.366	.000**	3.455			
정당(바른)	-5.455	3.715	-.109	-1.468	.146	2.323			
정당(정의)	-8.024	10.171	-.062	-.789	.433	2.577			
학력 (고졸이하)	-.662	3.553	-.011	-.186	.853	1.433			
학력 (전문대졸)	-7.076	13.326	-.039	-.531	.597	2.237	2.241	.817	24.613** (.000)
학력 (대졸)	-1.991	2.332	-.049	-.854	.396	1.400			
성별	-.001	5.905	.000	.000	1.000	1.288			
군복무	-1.844	2.920	-.038	-.631	.530	1.505			
연령	-.237	.192	-.081	-1.233	.221	1.828			
현직경험	7.224	3.913	.177	1.846	.069	3.871			
현직여부 (상수)	5.003	4.097	.116	1.221	.226	3.792			
	29.091	11.936		2.437	.017				

\*p<0.05, \*\*p<0.01, ad  $R^2=.784$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21] 전라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남세여부(체납)	-1.556	1.405	1.228	.268	.211	.013	3.309
전과개수	-.410	0.278	2.169	.141	.664	.385	1.145
정당			22.059	.001			
더불어민주당	2.687	0.626	18.444	.000**	14.692	4.310	50.087
자유한국당	-18.051	28140.480	.000	.999	.000	.000	
바른미래당	-19.232	17247.568	.000	.999	.000	.000	
민주평화당	.031	0.729	.002	.966	1.032	.247	4.311
정의당	-19.025	19292.915	.000	.999	.000	.000	
학력			2.028	.731			
미기재	-21.444	23991.377	.000	.999	.000	.000	
고졸이하	.539	1.363	.156	.693	1.714	.118	24.795
전문대졸	-1.516	2.050	.547	.460	.220	.004	12.198
대졸	-.728	.609	1.429	.232	.483	.146	1.593
성별(여성)	-20.627	28299.621	.000	.999	.000	.000	
병역(미필)	1.122	.869	1.669	.196	3.072	.560	16.863
연령	-.043	.045	.932	.334	.958	.877	1.045
현직경험(있음)	.087	1.408	.004	.951	1.090	.069	17.225
현직여부(현직)	2.019	1.459	1.916	.166	7.529	.432	131.294
상수항	.904	2.686	.113	.736	2.470		
Cox&Snell $R^2 = .414$							
Nagelkerke $R^2 = .583$							
Hosmer와 lemeshow검정=7.203(.515)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22] 전라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체납	-7.191	4.501	-.098	-1.598	.113	1.271			
전과개수	-2.115	.955	-.135	-2.214	.029*	1.258			
정당(민주)	29.392	3.091	.620	9.508	.000**	1.442			
정당(자한)	-11.723	11.195	-.065	-1.047	.297	1.323			
정당(바른)	-11.211	6.617	-.098	-1.694	.093	1.128			
정당(민평)	9.057	3.250	.173	2.786	.006**	1.309			
정당(정의)	-7.175	7.470	-.056	-0.961	.339	1.159			
학력 (미기재)	-2.304	10.313	-.013	-0.223	.824	1.122			
학력 (고졸이하)	7.343	6.450	.070	1.138	.257	1.276	2.406	.664	14.065** (.000)
학력 (전문대졸)	-2.170	6.512	-.019	-0.333	.740	1.093			
학력 (대졸)	-5.711	2.680	-.122	-2.130	.035*	1.112			
성별	-2.541	10.703	-.014	-0.237	.813	1.209			
군복무	5.106	3.692	.087	1.383	.169	1.337			
연령	0.078	.191	.026	0.407	.685	1.408			
현직경험	5.125	5.740	.099	0.893	.374	4.178			
현직여부 (상수)	11.092	6.265	.192	1.771	.079	3.988			
	16.497	11.406		1.446	.151				

\*p<0.05, \*\*p<0.01, ad R<sup>2</sup>=.617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23] 경북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납세여부(채납)	-21.054	11741.000	.000	.999	.000	.000	
진과개수	-0.531	0.383	1.917	.166	.588	.278	1.247
정당			19.289	.000			
더불어민주당	-0.248	1.263	0.038	.845	.781	.066	9.271
자유한국당	4.311	1.080	15.940	.000**	74.518	8.978	618.533
바른미래당	-18.959	13689.459	0.000	.999	.000	.000	
학력			1.060	.787			
고졸이하	-15.586	13747.069	.000	.999	.000	.000	
전문대졸	1.148	1.380	.692	.406	3.152	.211	47.117
대졸	.705	.825	.731	.393	2.024	.402	10.191
성별(여성)	-17.294	28059.645	.000	1.000	.000	.000	10.445
병역(미필)	-1.770	1.384	1.635	.201	.170	.011	2.566
연령	.117	.091	1.659	.198	1.124	.941	1.344
현직경험(있음)	1.056	1.212	.760	.383	2.874	.267	30.892
현직여부(현직)	-0.340	1.281	.070	.791	.712	.058	8.760
상수항	-9.523	5.824	2.674	.102	.000		
Cox&Snell $R^2$ =.487							
Neglkerke $R^2$ =.693							
Hosmer와 lemeshow검정=8.276(.407)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24] 경북 분석 결과(다중회귀)

중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체납	-1.412	4.676	-.021	-.302	.763	1.043			
전과개수	-.380	1.144	-.025	-.333	.740	1.223			
정당(민주)	11.982	3.402	.276	3.522	.001**	1.341			
정당(자한)	21.217	3.231	.538	6.567	.000**	1.471			
정당(바른)	-9.310	5.150	-.129	-1.808	.074	1.118			
학력 (고졸이하)	-14.190	6.253	-.197	-2.269	.026*	1.648			
학력 (전문대졸)	2.998	5.082	.042	.590	.557	1.089	1.772	.584	9.833** (.000)
학력 (대졸)	-3.384	2.829	-.086	-1.196	.235	1.128			
성별	-7.534	9.737	-.057	-.774	.441	1.200			
군복무	-2.155	4.020	-.042	-.536	.593	1.340			
연령	.161	.227	.058	.706	.482	1.485			
현직경험	13.283	4.708	.330	2.821	.006**	3.002			
현직여부 (상수)	10.659	14.100		.756	.452				

\*p<0.05, \*\*p<0.01, ad R<sup>2</sup>=.525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25] 경남 분석 결과(로지스틱)

변수	B	S.E.	Wald	p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납세여부(체납)	-0.467	0.761	0.377	.539	.627	.141	2.786
전과개수	-0.296	0.332	0.792	.374	.744	.388	1.427
정당			19.329	.002			
더불어민주당	3.516	0.868	16.417	.000**	33.662	6.144	184.439
자유한국당	2.070	0.897	5.330	.021*	7.926	1.367	45.957
바른미래당	-18.084	10841.767	.000	.999	.000	.000	
민주평화당	-16.867	28398.539	.000	1.000	.000	.000	
정의당	-18.506	40192.970	.000	1.000	.000	.000	
학력			.043	1.000			
미기재	-17.623	21208.094	.000	.999	.000	.000	
고졸이하	0.041	1.077	.001	.970	1.042	.126	8.602
전문대졸	-18.133	19537.278	.000	.999	.000	.000	
대졸	.114	0.549	.043	.836	1.120	.382	3.284
성별(여성)	-.174	1.286	.018	.892	.840	.068	10.445
병역(미필)	.073	.931	.006	.937	1.076	.174	6.667
연령	.035	.045	.599	.439	1.035	.948	1.130
현직경험(있음)	.540	1.236	.191	.662	1.716	.152	19.362
현직여부(현직)	-.877	1.214	.521	.470	.416	.039	4.495
상수항	-4.675	2.917	2.569	.109	0.009		
Cox&Snell $R^2 = .315$							
Nagelkerke $R^2 = .451$							
Hosmer와 Lemeshow검정=6.188(.626)							

\*p<0.05, \*\*p<0.01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부록 표26] 경남 분석 결과(다중회귀)

종속변수: 후보자 득표율									
변수	B	SE	Beta	t	p	VIF	DW	R <sup>2</sup>	F
체납	-4.474	2.304	-.083	-1.942	.054	1.241			
전과개수	-.153	.491	-.014	-.312	.756	1.311			
정당(민주)	35.609	2.196	.807	16.214	.000**	1.701			
정당(자한)	30.354	2.385	.688	12.726	.000**	2.006			
정당(바른)	-4.126	3.011	-.061	-1.370	.173	1.352			
정당(민평)	-3.042	6.748	-.018	-.451	.653	1.138			
정당(정의)	-9.160	9.542	-.039	-.960	.339	1.146			
학력 (미기재)	-4.922	6.016	-.036	-.818	.415	1.346			
학력 (고졸이하)	-2.672	2.899	-.039	-.922	.358	1.253	2.380	.827	35.524** (.000)
학력 (전문대졸)	-0.419	4.945	-.004	-.085	.933	1.204			
학력 (대졸)	-1.388	1.836	-.032	-.756	.451	1.256			
성별	1.027	4.322	.013	.238	.813	1.990			
군복무	2.012	2.888	.037	.697	.487	1.950			
연령	.148	.132	.055	1.123	.264	1.668			
현직경험	4.221	3.782	.082	1.116	.267	3.700			
현직여부 (상수)	.334	3.947	.006	.085	.933	3.643			
	2.140	8.121		.2637	.793				

\*p<0.05, \*\*p<0.01, ad R<sup>2</sup>=.804

※준거변수(reference): 지역-서울, 학력-대학원이상, 정당-기타 및 무소속

## Abstract

# The Impact of the Candidates' Morality on the Results of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 Focused on 7<sup>th</sup> National Local Elections for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KIM, Keunwoo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candidates' morality for a public official el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7th national local government election. Specifically, it examines whether the voters vote in consideration of the morality of the candidates, paying attention to the criminal records and tax delinquency in connection with the candidates' past. The information regarding criminal records and tax delinquency records of the candidates required for this study is collected through the disclosed information on the individual

candidates released during the election period. The information on the elected candidates and the percentage of votes is collected in the election statistical system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fter the end of the elec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include the number of criminal records and tax delinquency cases in relation to the candidates while the dependent variables are whether the candidate is elected or not and the percentage of vote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used when whether the candidate is elected or not i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whil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used when the percentage of the votes i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findings of the study demonstrate that the number of criminal records and tax delinquency cases of the respected candidates, which highlight the candidates' morality, influenced the voter choices in the 7th national local government election. On the other hand, whether or not the candidate's morality affects the election results and the magnitude of such an effect are found out to be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and according to political par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morality of the candidates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at the number of criminal records associated with the candidates is used as the variable unlike other similar studies and that the scope of the study is extended to the elections of local governments.

**keywords : criminal record, tax delinquency, local governments,  
election results, candidataes, morality**

***Student Number : 2014-23668***